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2022. 12. 27 **화** 14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소병훈**, 경기도의원 **임창휘**, 광주시의원 **이은채 · 오현주 · 왕정훈**

좌장

김재열 교수 (동원대 사회복지과, 전 광주시 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발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임신부영양지원센터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이종현 원장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남옥주 팀장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

토론

장은경 수석 컨설턴트(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 분야,
세브란스병원 진료혁신센터 환자안전팀장)

고범자 컨설턴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 병원신생아간호사회 회장)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한진숙 과장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최영준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목 차

- 인사말 **소병훈** 국회의원 (경기 광주시갑)..... 5
 - 임창희** 경기도의원..... 8
 - 이은채** 광주시의원..... 10
 - 오현주** 광주시의원..... 12
 - 왕정훈** 광주시의원..... 14

- 축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6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
 - 김동연** 경기도지사..... 22

- 발 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 이재희** 연구위원..... 25
(육아정책연구소 임산부영양지원센터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 이종현** 원장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39
 - 남옥주** 팀장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 49

● 토 론	장은경 수석 컨설턴트	57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 분야, 세브란스병원 진료혁신센터 환자안전팀장)	
	고범자 컨설턴트	6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 병원신생아간호사회 회장)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67
	한진숙 과장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	73
	최영준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79
● 별 첨	참고자료 1.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85
	참고자료 2. [국회도서관] 국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	95
	[국회도서관] 공공산후조리원 만족도 및 찬반 각계의견...	111
	[국회도서관] 중국의 산후조리원 현황.....	123
	참고자료 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참고자료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인 · 사 · 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동원대학교 김재열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님, 남옥주 행정팀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소 병 훈

국회의원 (경기 광주시갑)

이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광주보건소, 보건복지부,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육아정책연구소,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 여러분과 광주시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당원 여러분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지난 6월 1일 열렸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동공약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광주시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후 불편한 몸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먼 곳으로 소위 ‘원정 산후조리’를 다녀오신 광주시민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 산후조리원에 다니시더라도 비싼 비용과 먼 거리 탓에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을 듣고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을 광주시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렇듯 산후조리원이 많은 서울특별시 등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것은 산간벽지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광주시 산모와 산아가정을 위해서는 산후조리와 관련해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 정책 대상자인 산모 입장에서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비율이 81.2%에 달할 정도로 산후조리 장소로 가정이 아닌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을 비추어볼 때,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보다는 양질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산모, 산아, 산모 가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산모 가정은 2021년 기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평균 250만 원을 지출해 각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된다면 이같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민들의 숙원과 뜻을 모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함께 손을 잡고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산후조리 관련 사업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육아가정의 편의를 위해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창휘 경기도의원은 내년 (가칭)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은 시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광주시청, 광주보건소와 함께 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에 22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혹은 개설 논의 중이고 그 중 광주시의 이웃도시인 경기도 여주는 2019년 5월 개소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이용료로 여주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걸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보편적인 필요성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광주시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시의 재원 마련 문제 등 현실적인 측면도 함께 논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에도 시·도의원과 함께 광주시와 민생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27일

국회의원 (경기 광주시갑) **소 병 훈**

인 · 사 · 말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임창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병훈 국회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공동주최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임 창 휘

경기도의원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에서 2026년 0.69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망치에도 출산 부부가 겪는 출산, 산후 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산후조리 비용의 경우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78.1%)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가정의 경기도민, 광주시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비용으로 인해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출산의 과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가족이 함께 지내던 시절에는 산후조리를 가족들이 담당해주었지만, 현대화된 지금은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산후조리를 받아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경기도지사였을 시절, 경기도 출산 가정의 짐을 덜어주고자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2019년 5월 개원했습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이 평균 266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63% 수준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기존 2개소(경기도 여주, 포천)를 포함해 공공산후조리원 29개를 신설하여 도내 총 31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 2026년까지 총 1,566억 원(도비 100%)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요금감면 제도를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서비스에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품질을 유지하려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경기도민과 광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에 있고 국회의원, 시·도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시도의원들이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그리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 오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서 고견을 나눠주신 것을 바탕으로 현실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경기도의원 임 창 휘

인 · 사 · 말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우선, 「경기도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하여 광주시민 여러분과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 채
광주시의원

해가 갈수록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 비단 우리 광주지역만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후보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원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도 미치지 못해 민간 산후조리원도 전무한 실정이며, 산모들은 출산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인근 서울시와 성남시 등의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상황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추진 논의만으로도 당장 출산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실질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안 등에 대하여 가감 없이 논의해 주시길 기대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출산, 양육, 돌봄, 육아 등의 정책사업 집행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소병훈 광주시(갑) 국회의원님, 임창휘 경기도의원님, 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님과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광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광주시의원 **이 은 채**

인 · 사 · 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바쁘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소병훈 국회의원님과 경기 광주(갑) 시·도의회이 공동주최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재열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종현 원장님과 이재희 위원님을 비롯한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 현 주
광주시의원

오늘 토론회 주제인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 출마자들의 공동공약이었습니다. 광주시에는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출산 후 산모와 아기가 가족과 떨어져 먼 곳으로 나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에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이러한 지원에도 산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지 가까이
에 있는 산후조리원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인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되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 참
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광주시의원 **오 현 주**

인 · 사 · 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갑) 기초의원 왕정훈입니다.

바쁘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왕 정 훈

광주시의원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출생률(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 국가입니다. CNN이 분석한 한국의 저출생 원인에 따르면 ‘한국이 2,0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만큼 지불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만 1세 이하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월수당을 늘리는데 그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과 지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광주시 40만 인구 중 20-39세 인구는 10만여명으로 25%를 차지합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1곳이고 산후조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전체의 7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산모들은 출산 후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근 도시로 원정 출산 또는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저출산으로 병원 분만 건수가 줄고, 병원들이 해가 갈수록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분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광주시 산부인과는 분만을 접어야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에 비해 적게는 20만원 이상, 많게는 18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양질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산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작 확장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이 더딘 이유로는 지자체 재정 부족이 먼저 꼽힙니다. 가동률 100%를 유지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인력 수급도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도 거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안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광주시의원 **왕 정 훈**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님과 임창휘 경기도의원님,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올해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0.69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내수산업 위축 등 사회경제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당장 출산의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부담도 초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큼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과, 코로나19의 위기에도 철저한했던 방역, 위생관리로 산모들의 만족도가 컸습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24곳에 불과하고, 추가설립은 더디기만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립과 지원에 대한 문제는 중앙과 지역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산업을 포함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안 등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출산, 양육, 돌봄, 육아 등 국가 책임제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재명*

축·사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토론회를 주최하신 소병훈 국회의원님, 임창휘 경기도의원님,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님 감사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 홍 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산과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이용료 또한 저렴해 산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려운 양육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산후조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모와 아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 광주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홍 근**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 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소병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시·도의원님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김재열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종현 원장님과 이재희 위원님을 비롯한 패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 춘 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산후조리원은 핵가족화로 과거 산후조리를 담당하던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출산 후 필수적으로 입소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비용 부담이 상당해, 날이 갈수록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뿐 아니라,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광주시의 이웃 동네이자, 제 지역구의 용인시 수지구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산후조리를 비롯한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 춘 속**

축·사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소병훈 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님, 임창휘 경기도의원님,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님과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동 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5월에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고 올해 12월에는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이 없는 취약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하여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출산 후 지원사업은 산모를 위한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출생부터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과 계층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 **김 동 연**

발제
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임산부영유아지원센터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배경과 현황

이재희 연구위원



01. 산후조리원 탄생 배경

WHO 모성사망 기준

-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주 이내의 임신, 분만과 관련된 사망
- 생후4주 미만 신생아의 사망을 '신생아 사망' 으로 구분

산후조리(산욕기)

- 분만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낫고 자궁이 평상시 상태가 되며 신체의 각 기관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6주기간의 기간

01. 산후조리원 탄생 배경

한국의 산후조리: 삼칠일

- 한국 사회에서는 산후 3주까지의 초기 산육 기간을 삼칠일이라고 명명하며, 산모가 절대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신체·심리·사회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간주하는 전통
- 과거에는 주로 가족의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를 받게 됨

01. 산후조리원 탄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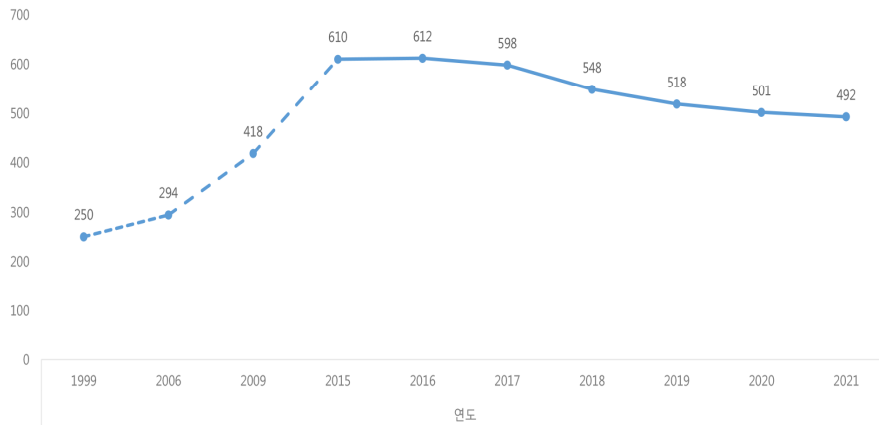
최초의 산후조리원: 1996년 10월 인천 남동구에 개설된 사임당 산후조리원

- 핵가족화, 출산연령 증가로 인한 산후조리 지원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부족
-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국가지원 시스템 부재: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의료보험 재원으로 모성 방문 간호사가 7~10일간 매일 방문하여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상대적으로 선진국가에 비해 낮은 인건비: 낮은 가격으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산후조리원 탄생 초기에는 2주에 80만원 이하였음)

02.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

1997년 말부터 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산후조리원 개소수 변화



02.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2020년도에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6주간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 :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비율 : **81.2%**
※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는 75.1%였음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 증가

→ **산후조리원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높아지고 있음**

03.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논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논란

- 2018년 산후조리실태조사 220만 7천원
-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 243만 1천원
-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기준마련 방안 연구(2020) 326만원(마사지 등 추가비용 포함)

경향신문 

[독자의소리] 출산비용 정부가 부담을

입력 2004.08.27. 오후 6:41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03년의 총 출생아 수는 49만3천5백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령대 불균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엔 1천5백만명대로 노동인구가 감소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출산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선 만혼 풍조, 높은 육아비용, 취업 불이익 등을 꼽는다. 또한 출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요즘은 출산과정에서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을 거치는 것이 필수코스로 되어 있다.

지난 5월 자연분만으로 손자를 보았을 때의 일이다. 산모와 아기가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거쳐 13일 만에 퇴원했는데 모두 2백만원이 들었다. 한 가족은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고 병원에서 3일, 산후조리원에서 3일을 지냈는데 65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만약 제왕절개 등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터이다. 또 영유아 의료·용품도 턱없이 비싸다. 이러니 웅칫논이 없으면 아기를 낳기가 힘들다. 일부 지자체에서 20만~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병원비에도 모자라는데 누가 따르겠는가. 같은 OECD국가인 호주는 지난 7월부터 출산장려책으로 아기를 낳으면 약 2백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출산 비용을 부담하고, 보건소에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우승남/경기 고양시 화정동>

03.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논의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국민일보 

당국 "산후조리원은 서비스업" 방치

입력 2001.11.01. 오전 11:30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닌 서비스업 형태로 관리돼 안전사고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관리해야 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3차례나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2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9명이 세균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중 3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역 보건소와 시 위생과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면역기능이 약한 신생아와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곳인데도 정부는 이를 단순 서비스업 형태로 방치해 결국 이같은 사고로 이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일산 J산후조리원에 대한 시민 불만이 소비자단체에 접수돼 일산구 위생과 직원이 문제된 산후조리원의 실태파악에 나섰다가 오히려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산후조리원의 위생상태,요금문제 등의 시비가 계속됐고 신생아와 산모가 숨지는 사고가 지난해 2건이나 발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세균감염 등 피해신고가 지난해 120건, 올해 10월까지 156건에 이르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03.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논의

공공산후조리원 History

- 2006년 민선 4기 지자체장 선거 시 공공산후조리원 공약 논의
- 2011년 제주도 도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논의(김영심 도의원)
- 2012년 제주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조례안 상정
- 2012년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공공의료기관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안
- 2012년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
- 2013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
- 2013년 3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개소
- 2014년 3월 송파구공공산후조리원 개소

03.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논의

2015년 당시 법령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양승조, 남인순, 신학용, 강동원 의원 발의안

현재 법령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2021. 12. 21.>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22.]

04.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연번	지역	산후 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		이용요금 (만원)	
						시설	입산부실	지역 주민	타 지역주민
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 조리원	'13.3	위탁	서귀포 의료원	1층 단독 건물	14	154	
2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 건강증진 센터산후 조리원	'14.3	위탁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센터 내 자상 3-5층	27일	190	209
3	전남 해남군	전남공공산후 조리원	'15.9	위탁	해남 종합 병원	해남 종합 병원 4층	10	154	
4	강원 삼척시	강원도 삼척 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6.2	위탁	삼척의료원	병원 별관	15	본원출산 162만원 타병원출산 180만원	
5	전남 강진군	전남공공산후 조리원 2호점	'18.5	위탁	강진 의료원	자상 1층 단독 건물	10	154	
6	경기 여주시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9.5	위탁	경기도 의료원	자상 2층 단독 건물	13	168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	
7	전남 완도군	전남공공산후 조리원 3호점	'19.6	위탁	완도 대성 병원	자상 2층 단독 건물	10	154	
8	강원 철원군	강원철원공공산후조리원	'20.3	위탁	철원 병원	자상 3층 단독 건물	10	89.6 또는 161.28 ※	179.2

04.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9	강원 양구군	양구공공산후조리원	'20.7	위탁	성심의료재단	자상 2층 단독 건물	8	180	
10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 11	위탁	울진 의료원		8	182	
11	전남 나주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4호점	'20. 12	위탁	빛가람종합병원	병원내 자상 2층 단독 건물	10	154	
12	울산 북구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21.7	위탁	세나 요양 병원	자상 3층 단독 건물	28	189	
13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2.1	위탁	화천군보건의료원	의료원 별관 2-3층	5	180	
14	충남 홍성군	홍성 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2.2	위탁	홍성의료원	병원내 별관 자상 1층	8	182	
15	전남 순천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5호점	'22.3	위탁	순천 현대 여성 이동 병원	병원내 4층	5	154	
16	경남 밀양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22.5	위탁	제일 병원	자상 2층	8	160	

04.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17	경기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22. 연말 (예산)	위탁	미정	지상 2층	20	168
18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공공산후조리원	'22. 10 (예정)	미정	서대문구청	지하 1층, 지상 4층	12	250
19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2. 10 (예정)	위탁	김천 의료원	지상 2층	12	168
20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3.5 (예정)	미확정	미확정	지상 2층	13	미확정
21	강원 속초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23. (예정)		속초 의료원	지상 2층	10	미확정
22	강원 영월군	영월군공공산후조리원	'24 (예정)	위탁	영월 의료원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23	강원 태백	태백공공산후조리원						
24	인천							

- 문경, 논산, 김제, 아산, 고창, 동두천, 용인, 전남형공공산후조리원 3곳 추가 개설 예정, 음성, 공주, 인제, 고양, 서산, 과천 등도 논의 중

04.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비용, 취약계층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대부분 취약계층 할인 혜택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관내 거주자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 곳도 있음

시설 및 인력

→ 고층에 위치해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2층 이하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화재 발생 시 안전)

→ 모자동실 운영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4.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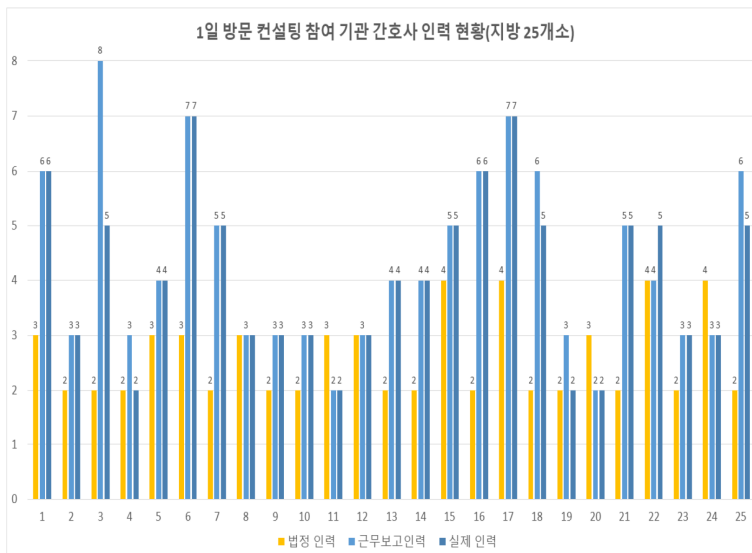
출산 24개월 미만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구분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3.7	16.3	100.0 (608)
지역	대도시	84.6	15.4	100.0 (357)
	중소도시	81.0	19.0	100.0 (163)
	읍/면지역	85.2	14.8	100.0 (88)
	χ^2	1.243(2)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9.4	30.6	100.0 (36)
	200~400만원 미만	79.3	20.7	100.0 (208)
	400~600만원 미만	89.2	10.8	100.0 (186)
	600~800만원 미만	88.3	11.7	100.0 (111)
	800만원 이상	82.1	17.9	100.0 (67)
	χ^2	14.325(4)**		

→ 소득이 낮은 계층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떨어짐

04.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간호사 인력조사 결과



→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에 따라 간호사 법정인력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0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문제

적자 운영

→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매년 5억~10억 적자운영(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자금 보조)

전국 첫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중단 계획에 송파구 입산부들 분통

일석 | 2022.07.21 15:30 | 김보희 기자

📄 🗨 📧 📄 📄 📄



송파구 산후조리원 입산부들.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송파구 산후조리원 입산부들 (송파구 제공)

서울의 유일한 공공 산후조리원인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입산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꾸리는 조리원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거치며 재정 부담이 커진 탓이지만 '당중앙을 우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파구보조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항 방침에 따라 산후조리원 운영 중단이 예정돼 예정대로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출산 예정일이 오는 9월25일에서 10월1일 사이의 입산부들을 대상으로 이날 27일 마지막 시설 후회가 이뤄진다.

전하는 그간 예정일을 2~3개월 앞둔 입산부들 대상으로 선적순으로 하여 신장을 받아 조리원을 출생할 기회를 제공한 뒤 이용 예약을 받았다. 지양한 요양에 민간 조리원 못지않은 시술과 브로그를 올 것인 듯이 신장은 예약 시각 1~2분 내 완료되고는 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출산과 관련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높이고,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생률을 높이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81.2%로 2020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보완해 왔다.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쌍둥이 등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민간 조리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케어도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이 대안이 되기도 한다.



지역 없이 본 기사

- 1. '명품 양육센터' 1층 총 1억 142억2000만원-최고가로 영산
- 2. 3년 만의 부동산 침체, '계명'이 '뱅크가 될까?'
- 3. '두번팔' 찾아보고 싶은 '두번팔' 찾아보고 싶은
- 4. '리소스 필요' '리소스 필요' '리소스 필요' '리소스 필요'
- 5. '리소스 필요' '리소스 필요' '리소스 필요' '리소스 필요'

0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문제

설립비용(A 지자체 사례)

(표 IV-2-1) 지하2층-지상3층 건립비 추산(건축면적 543m²)

내역	금액	내역
공사비	9,387,726천원	2,714m ² × 3,459천원/m ²
설계비	516,325천원	9,387,726천원 × 5.0% + 46,939천원(부가세)
감리비	175,551천원	9,387,726천원 × 1.07% + 15,959천원(부가세)
합계	10,079,601천원	공사비(9,387,726천원) + 설계비(516,325천원) + 감리비(175,551천원)

경제적타당성(A 지자체 사례)

(표 4-1) 가동률 100% 가정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사회적 할인율 4.5%)

단위: 천원

이용료	경제적 타당성		수지분석 (건립비+운영비)	수지분석 (운영비)
	NPV	B/C		
250만원	NPV	-5,526,751	없음	-11,585,498
	B/C	0.88		
	IRR	-1%		
300만원	NPV	1,770,861	있음	2,338,822
	B/C	1.04		
	IRR	6%		

06. 경기도 광주시 산모 면담 결과

산모	거주지	출산병원	산후조리원
A(자녀3)	추자동	아산병원	이용하지 않음
B(자녀 1)	태전동	분당	분당 (신데렐라 산조리원)
C(자녀 1)	오포읍	분당 (곽생로산부인과)	분당 (곽생로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D(자녀 1)	광남2동	분당	분당

06. 경기도 광주시 산모 면담 결과

- 광주 임신부는 주로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함
- 산후조리원도 역시 분당에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함
- 소아청소년과는 광주시 소재 병원 이용
- 대형병원과 공공의료원이 부족함
- 경기도 산후조리원 바우처는 주로 생활비로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가 부적절함(남한산성면)

06. 기타 고려 사항

-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의 관계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저출생 대응 정책인가?
-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경합관계
- 모자보건, 육아 등을 포함한 복합인프라 구축

감사합니다

발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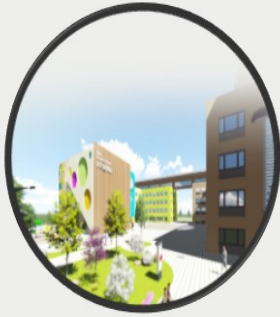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이종현 원장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복도시 희망여주

♥개원 2019년 5월 ♥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목 차

I. 개요

II. 추진배경

III. 추진경과

IV. 조례제정

V. 관리위탁

VI. 시설현황

VII. 이용료

VIII. 조감도, 배치도

I. 개요

-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9. 2월 준공
- ▶ 설치자 : 여주시장
- ▶ 운영형태 : 관리위탁(경기도의료원)
- ▶ 위치 :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6
- ▶ 총사업비 : 5,120백만원(도비 2,000, 시비 3,120)
- ▶ 규모 : 연면적 1,498.53㎡(지상 2층)
- 1층 모자건강증진실, 2층 산후조리원(13개실)

설치근거 : 「모자보건법」15조의17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5조
[경기도 건강증진과-6252('16.03.31)] 설치 지원계획 확정 통보

II. 추진배경

- ▶ 2016. 1. 4.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
 - 대상: 산후조리원이 없는 4개 시군(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방법: 공모(위탁운영)/공공의료기관과 컨소시엄
⇒ 공공의료기관 중 선정(근거: 보건복지부 협의 보완 사항)
- ▶ 2016. 3. 31.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공모 선정
 - 운영형태 : 여주시 직영 또는 공공병원 위탁 (공공성 확보)
 - 운영비 : 도비 70%, 시비 30%

Ⅲ. 추진경과

- 2016. 3.31.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계획 확정 통보
- 2016. 9.26. : 설치지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2017. 5. 25. ~ 7. 3. : 건립 실무위원회 및 민·관 협력 자문위원회 2차 개최
- 2017. 11.14.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비 증액 검토보고
- 2017. 11.27. :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 11월 28일 ~ 12월 15일 BF예비인증 취득
- 2017. 12.15.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사업 실시계획 완료
- 2017. 12.20. : 건축총괄, 통신, 전기, 소방 계약 완료
- 2017. 12.27.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총괄(회계과 청사건립팀)
- 2017. 12.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1. 4. : 건축(증축) 협의 완료
- 2018. 3. 5. : 착공
- 2019. 5. 3. :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2022. 3. 4.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예약방식 기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

Ⅳ. 조례제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의견조회(2018. 6.15.)
-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 : 7월 → 수정 조례(안) 가결

[주요내용]

- 이용대상자 : 경기도민(여주시민 우선)
- 이용료 : 2주 168만원(2016년 경기도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 결정/ 시중가 70% 수준)
-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취약계층 등 50% 감면

* 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등

V. 관리위탁(수익계약)

- ▶ **1차 관리위탁** : 여주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심의(가결)
- ▶ **2018.12.19.** : 여주시 & 경기도의료원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기간(5년) : 2019. 1. 1.~2023.12.31.
 - 인력(18명) : 관리책임자1, 간호사3, 간호조무사8, 행정1, 취사원3, 미화원2
 - 2019년 운영비 : 7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 2020년 운영비 : 8억6천만원(도비6억원, 시비2억6천만원)
 - 2021년 운영비 : 8억6천만원(도비6억원, 시비2억6천만원)
 - 2022년 운영비 : 8억6천만원(도비6억원, 시비2억6천만원)
- ❖ **수익계약 가능여부 행안부 질의('18. 5. 9.)**
 - (답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리위탁 수익계약 가능

VI. 시설 현황(총 면적 1,498 m²)



1층 모자건강증진실 (730m²)



사무실, 조리교실
상담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세탁실, 기계실 등

2층 산후조리원 (768m²)



모자동실, 신생아실
간호사실, 식당, 찜질방
상담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Ⅶ. 이용료

구분	1주(7일)	2주(14일)	비고
금액	84만원	168만원	1주당 84만원씩 추가

1. 이용료 : 산모 1명&영유아 1명 기준, 1일 기준 단가 12만원

2. 쌍생아 등의 출산 :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 추가

3. *감면대상자 이용료의 50% 감면(2주 이용시 84만원)

*감면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등

※ 2주/168만원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책정
(2016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평균의 80%)

※ 2021년 9월 : 3주 4주 운영 예약 관련 조례 삭제로 3-4주 운영 안함

Ⅷ. 이용현황

구분	총인원수,비율(%)		타지역								
			56.1								
	총계	평균 이용률	여주시 계	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안산시	양평군	화성시	기타
	871	93	382	489	30	96	123	11	67	11	151
2022년 누계	172	100	72	100	7	12	30	5	19	5	22
2022년 7월	23	100	12	11	0	2	4	0	4	0	1
2022. 전월누계	149	100	60	89	7	10	26	5	15	5	21
2021년	279	97	125	154	3	34	43	1	21	3	49
2020년	282	98	126	156	12	31	39	1	18	1	54
2019년	138	72	59	79	8	19	11	4	9	2	26

***감면 대상자 비율**

구분	총인원수	일반대상자		감면자					
		58.9		41.1					
	총계	계	계	다등이	다문화	유공자	장애인	기타	
	871	513	358	260	43	14	8	33	
2022년 누계	172	116	56	23	13	2	0	18	
2022.7월	23	16	7	5	2	0	0	0	
2022. 전월누계	149	100	49	18	11	2	0	18	
2021년	279	181	98	73	11	4	4	6	
2020년	282	151	131	104	13	5	2	7	
2019년	138	65	73	60	6	3	2	2	

Ⅸ. 조감도, 배치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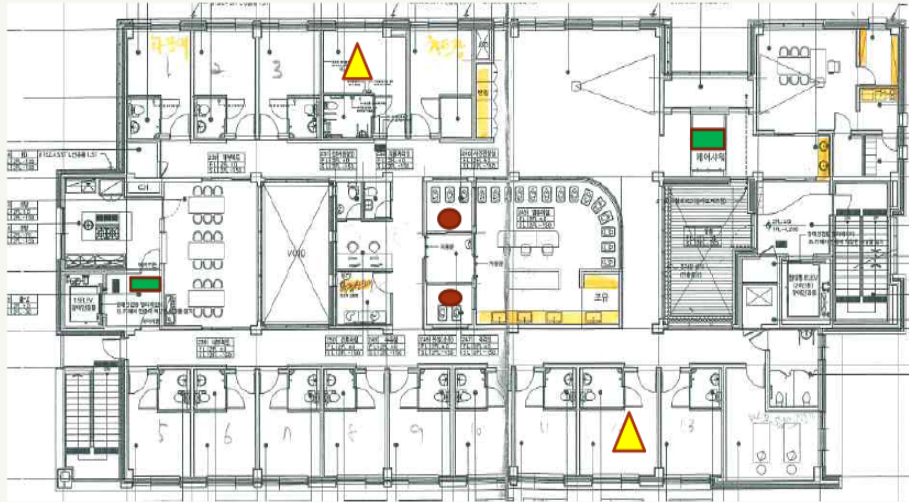


1층 모자건강증진실



2층 산후조리원 13실





- 사전관찰실, 격리실 → 음압시설 설치
- 산후조리 출입문 입구, 외부와 연결된 식당 입구 → 에어커튼
- ▲ 장애산모용, 쌍생아 출산 산모용 모자동실

발제
2-2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남옥주 팀장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남옥주 팀장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

□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명 칭 :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 소 재 지 :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6, 2층
- 2층(모자동실13실, 상담실, 식당, 프로그램실):742.27㎡, 1층(세탁실, 기계실, 용역원실)
- 위탁기관 : 경기도의료원
- 위탁기간 : 2019.1.1.~2023.12.31.(5년) ※ 개 원 : 2019. 5. 3.
- 인 력 : 18명(원장1, 간호사3, 간호조무사8, 취사원3, 미화원2, 행정1)
- 운 영 비 : 보조금(도비70%+시비30%) +이용료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이용료	결산잔액
		도비	시비		
2019년	878,236	500,000	200,000	178,236	129,513(이용료)
2020년	1,358,592	600,000	260,000	498,592	313,869(이용료)
2021년	1,170,957	600,000	260,000	310,957	361,953(이용료)
2022년	1,453,712(예산)	600,000	260,000	-	-

□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역할

- 사전관찰실과, 격리실에 음압설치를 하는 등 감염관리 체계구축 마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산후조리원의 신뢰구축으로 이용 산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높은 가동률을 보임.
- 21년 9월 더 많은 산모의 이용을 위해 3주, 4주 이용요금 삭제

□ 산모 이용 현황

○ 이용대상 : 경기도민(여주시민 우선 이용)

- 2019년 이용자 138명/ 여주 59명 43% /이용률 72%
- 2020년 이용자 282명/ 여주 126명 45% /이용률 98%
- 2021년 이용자 279명/ 여주 125명 45% /이용률 97%
- 2022년 8월까지 이용자 197명/ 여주 84명 44% /이용률 100%

구분	총인원수,비율(%)		여주시	타지역
			449%	56%
	총계(명)	평균 이용률(%)	총계(명)	
	896	93	394	502
2022년 누계	197	100	84	113
2022년 8월	25	100	12	13
2022.전월누계	149	100	60	89
2021년	279	97	125	154
2020년	282	98	126	156
2019년	138	72	59	79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이 용 료 : 2주 이용료 168만원(시중가의 70%)

-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수급자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50% 감면
-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에 의함

구분	총인원 수	일반대 상자	감면자					
		58.9	41.1					
	총계	계	계	다자녀	다문화	유공자	장애인	기타
	896	528	368	268	44	14	8	34
2022년 누계	197	131	66	31	14	2	0	19
2022.8월	25	15	10	8	1	0	0	1
2022. 전월누계	172	116	56	23	13	2	0	18
2021년	279	181	98	73	11	4	4	6
2020년	282	151	131	104	13	5	2	7
2019년	138	65	73	60	6	3	2	2

□ 만족도 조사

○ 만 족 도 : 이용자 만족도 2019년 평균 89점 /2020년 93점 /2021년 96점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7.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토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장은경 수석 컨설턴트(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 분야,
세브란스병원 진료혁신센터
환자안전팀장)

고범자 컨설턴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
병원신생아간호사회 회장)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한진숙 과장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최영준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간담회 토론문

장은경 수석 컨설턴트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 분야, 세브란스병원 진료혁신센터 환자안전팀장)

1.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최근 출산율 저하 및 산후조리원 관련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설 산후조리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산후조리원 인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해보면 많은 산후조리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지방이나 취약지역에는 사설 산후조리원이 거의 없고 설립 가능성도 적다. 핵가족화, 출산 연령 증가로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부족으로 아기를 출산한 산모의 80% 이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국가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원 운영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몇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산후조리원의 역할 및 운영의 변화 필요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허약해진 산모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보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산모의 휴식이 강조되면서 신생아와 분리되고 모아애착의 기회를 박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과거에 비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육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출산 후 육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출산 후 모아애착을 증대시키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출산 직후부터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 운영의 확대 및 의무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전담 교육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져 산후조리원 퇴실이후 가정 방문하는 건강관리사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육아와 연결되도록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모자동실 운영의 확대 및 의무화

(1) 모자동실의 중요성

- ① 적극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함
- ② 아기가 원하는 대마다 젖을 물릴 수 있어서 젖 공급이 확립되고 유두 동통도 줄일 수 있음
- ③ 신생아 관리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음
- ④ 엄마는 아기 돌봄을 통해 자신감과 행복을 느끼고 모성 정체성이 형성되고 아기와 애착이 강화됨
- ⑤ 신생아는 모유를 통해 엄마에게서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애착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됨
- ⑥ 아빠와 신생아의 애착 관계가 좋아짐

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을 기본원칙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전환하여 아기에게 친근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들에게는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부모됨의 이행을 자연스럽게 돕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2)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전담 교육 체계 운영

- 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전담 교육자 양성
- ② 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표준화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
- ③ 부모로서의 이행과정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역할변화의 선도자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역할을 한다면 사설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되고 가격경쟁뿐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원이 되리라 생각한다.

3. 산후조리원시설 및 설비의 변화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신생아 관련 시설이라 생각한다. 면역에 취약한 신생아들을 한 방에 집단 거주시키는 것은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면 집단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전관찰실에 여러 명의 신생아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초기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도록 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사전관찰실보다는 감염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격리할 수 있는 격리시설이 필요하고 신생아 감염이 발생하면 격리 조치하여 병원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감염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또한 산후조리원 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사항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의 한 축으로 관리되고 부모됨의 인식을 개선하는 단계로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확립된다면 사설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되고 엄마와 아기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고범자 컨설턴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 병원신생아간호사회 회장)

I. 서론

1. 산후조리원의 역사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위탁 시설은 국내에서 산후조리원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존재해왔다. 일본에서는 조산원(助産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1900년대 초부터 운영되어왔으며, 유럽에서도 분만센터(Birthing Center)의 형태로 산후조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때는 분만 시설과 태어난 아이에 중점을 둔 공동시설의 역할을 했다.
- 오늘날과 같은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의 산후조리를 다룬 시설의 등장은 1987년 독일 게부르트하우스(Geburtshaus)에서 시작되었고 기존의 분만에 중점을 두었던 시설들과 달리 출산을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에 집중하였고 80년대의 여성운동의 지원을 받아 산후 여성 건강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 점차 증대되기 시작했다.
- 국내에서 산후조리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97년이나 2009년 모자보건법 개정문에서 산후조리원의 법적인 규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급격히 수가 늘어났으며 외국의 모자보건 지원 형태와 달리 수익사업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2. 산후조리원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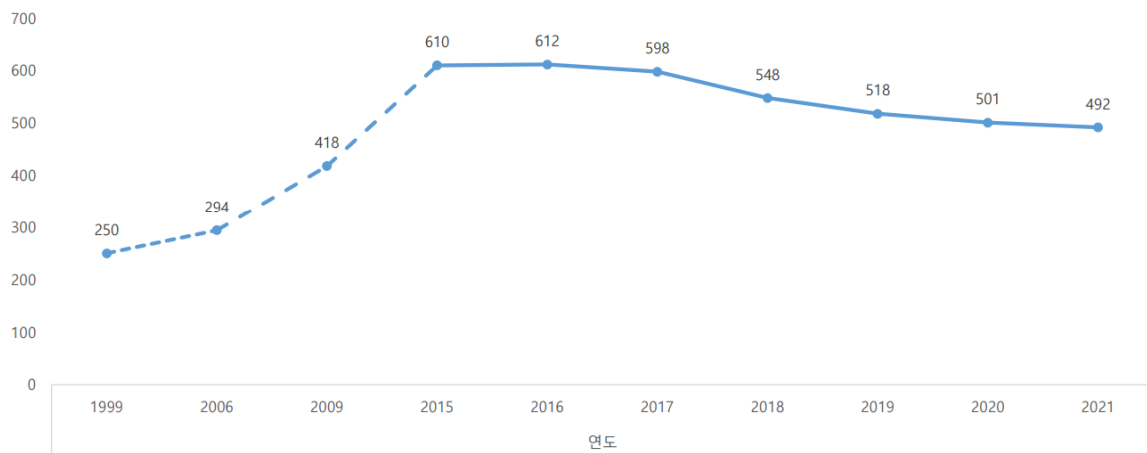
(1) 산후조리원이란?

-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함)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함(법 제2조 제10호)

(2) 산후조리원 연도별 변화

-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612개소로 최고조로 이르다가 저출산과 코로나 여파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산후조리원 개소수 변화



※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 발제문

3. 산후조리원 이용 형태 변화

(1)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

- 2018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율 75.1%에서 2021년 81.2%로 증가

(2)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2018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220만 7천원에서 2021년 243만 1천원으로 증가.

(3)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 2018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13.2일에서 12.3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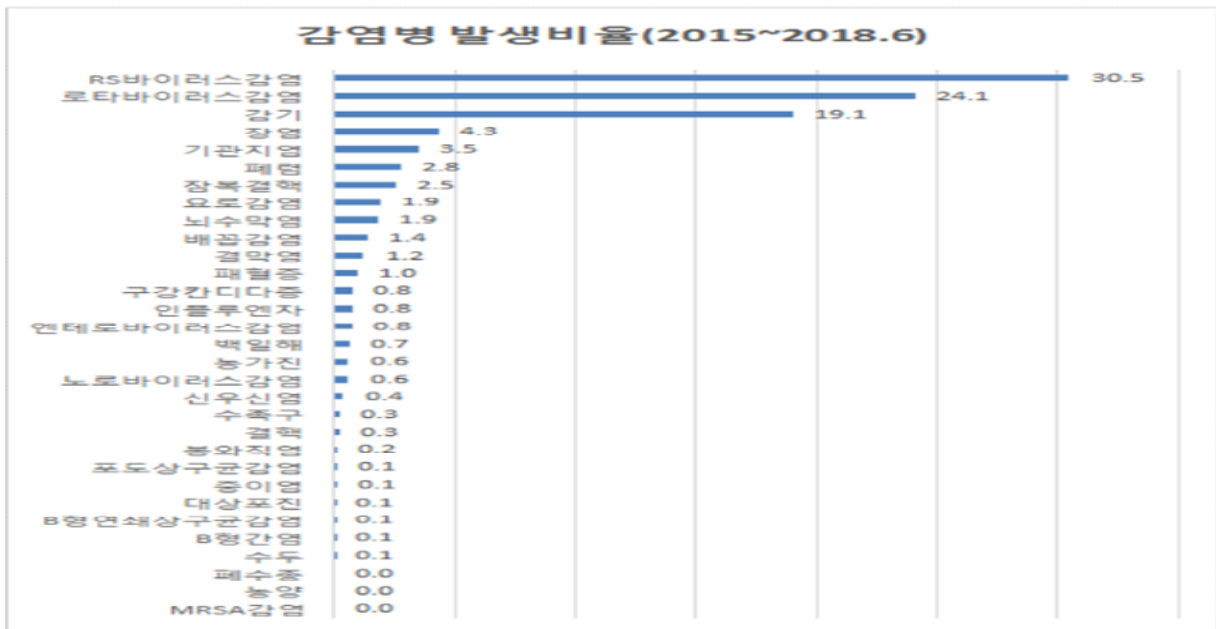
※ 출처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9.1.17, 22. 1. 26)

4. 산후조리원의 사회적 이슈 등장

(1) 감염 안전 문제 발생

- 산후조리원 이용객은 출산 직후 산모와 태어난지 3주 이내의 신생아로 면역체계 취약자가 모여있는 곳임에도 감염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감염병으로 인한 감염 확산과 화재를 포함한 신생아 안전사고가 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비율

단위(건수)




※ 출처 : 보건복지부

- 출산 산모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만큼 모자보건 및 신생아 건강이 국민건강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매뉴얼] 제작 및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문제 점검에 나서다

(2)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저출산 사회적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발제문 참조)

 보건복지부 일하는 행복한 친구		보도 자료 1월 10일(목) 석간(1.10 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1월 9일 / (총 12매)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과 장	양 찬 희	전 화	02-2023-8490
담당자	하 진		02-2023-8483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정부가 나선다.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등 강화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일하는 행복한 친구		보도 참고 자료	
배 포 일	2017.3.30. / (총 5매)		
감염병관리과	과장	조은희/이윤희	043-719-7120/7111
서울시 생활보건과	/담당	홍혜숙/함현진	02-2133-7660/7687
서울시 강서구보건소		최상범/송민진	02-2600-5803/5992

강서구 미즈메디병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 결과 병원 신생아실·산후조리원 감염예방수칙 철저 당부

- ◇ 강서구 소재 산부인과병원의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총 29명, 환경검체 6건 로타바이러스 양성 확인
- ◇ 병원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위해 감염예방 일반수칙 및 환경관리 강화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서울 강서구 소재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2017년 3월 15일 강서구 보건소에서 추가환자 발생여부와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 신생아 총 29명(10명 중상, 19명 무중상), 환경검체 6건을 확인하였다.
- 미즈메디병원에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원 신생아 총 118명 중

 보건복지부 일하는 행복한 친구		보도 자료 10월 29일(목) 조간(10.28.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5.10.28 / (총 15매)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과 장	우 향 제	전 화	044-202-3390
담당자	김 유 라		044-202-3397

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책 강화키로

- 신생아실 1인당 공간 확대, 외부방문객은 산모만 면회, 감염병 의심 총사자 업무제한,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명령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중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 * 산후조리원 수 : (11) 488 → (12) 540 → (13) 557 → (14) 592 → (15.6) 602
 - * 감염 현황 : (13) 49명 → (14) 88명 → (15.6) 270명(신생아, 산모) (중사자 포함)

 보건복지부 일하는 행복한 친구		보도 자료 9월 4일(화) 국무회의의 시작(08:00) 후 보도	
배 포 일	2018. 9. 3. / (총 2매)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과 장	손문금	전 화	044-202-3390
담당자	임정호		044-202-3397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개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개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Ⅱ.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1. 운영 목적

(1)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예방 관리

-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함으로써 감염 안전 예방 관리를 통해 감염 안전 문제 발생을 감소하고자 함

(2)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감소

- 취약계층 지원 및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료(발제문 참조)

2. 문제점

(1) 설립 비용(발제문 참조)

(2) 적자 비용(발제문 참조)

3. 해결되지 않은 과제

-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의 관계
-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경합관계

Ⅲ. 설립 추진 시, 고려사항 및 대안

1.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설립 비용 없이 감염 안전 문제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비용 절감- 설립 비용 문제 해결
-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산후조리원비용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사용하게 하므로써 이용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비 절감 혹은 위탁운영 조리업자와 운영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 운영적자 해결
- 산후조리원 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경합 관계 해결 및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 해결

2. 산후조리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 모델 도입 검토

- 운영 목적: 민간산후조리원 중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부모교육 및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강화 및 건강한 가정 육아 환경 조성
- 방법: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산후조리원에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 장비 지원 및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3.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예방 및 질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통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산후조리원 평가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종사자의 감염 안전 교육 강화(필수교육 확대)
- 상시 컨설팅을 통한 교육
 -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이용(필요시 의무 이행)
- 시설, 설비가 취약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조건부 설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지원 후 평가를 통해 감염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공공 산후조리원, 목적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백윤희 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1. 한국에서 ‘엄마’에게 산후조리원이 갖는 의미.

1) 엄마 노릇의 첫 교육장이자 육아에 대한 성별분업의 시작점.

한국의 산후조리¹⁾ 방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임신-출산-산후조리원으로 이어지는 관행은 1997년 국내에서 산후조리원이 처음 등장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확고히 자리잡았다.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에 의존했던 기존의 산후조리 문화는 가족 구성의 변화, 돌봄 노동의 시장화, 상업화에 따라 과도기적, 자생적 건강기관인 산후조리원으로 이양됐다.

2020년에 출산한 산모 중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 비용 평균은 243만 1000원 선²⁾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첫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 이용(75.1%→81.2%)과 선호는(75.9%→78.1%) 증가했다.

‘대한민국에서 엄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한, 책 ‘엄마의 탄생’(2014년, 오월의 봄 출판) 첫 장은 “산후조리원, 엄마를 찍어내다”로 시작한다. 이 책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의 ‘엄마 노릇의 첫 교육장’인 산후조리원의 역할과 지위를 이용자 인터뷰, 통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산후조리원에 대해 “출산 후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까지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 없는 산모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육아 노동 직전의 ‘최후의 만찬’이요, ‘엄마되기’의 훈련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서 ‘엄마되기’는 엄마 자신의 필요보다 자녀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이며 “자녀 중심적, 전문가의 지도에 따르며, 감정 소모적이고

1)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 간을 의미.

2)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모자보건법 제 15조 20에 따라 산모, 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

노동집약적, 재정부담을 감수하는”것을 의미한다.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급속한 호르몬 분비, 유즙분비, 젖 몸살, 산후통, 회음부 절개 통증 등)과 극심한 피로 속에서 신생아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 역할 긴장 등 정서적 문제를 동시에 겪으며 몸과 마음이 엉망인 상황이지만 산모들은 당장 아이 안고 젖 물리기, 기저귀 가는 법, 속싸개 싸는 법, 손톱 발톱 깎고 목욕시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법 기관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를 산모의 산후조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신생아의 집단관리행위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갓 해산을 한 엄마’를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고, 신생아의 모습을 자신의 아기를 통해 처음 접하기도 하는 요즘의 산모들에게 육아를 배우는 인생의 첫 교육장이 조리원인 셈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역국 먹기로 시작해 모유 수유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젖, 모유일 정도여서 지난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산후조리원’에는 “젖을 돌게 하고, 젖을 마사지하고, 젖을 짜는…… 젖과 같은 월드”라는 차마 웃지 못할 대사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신체는 도구화 되고, 불편함과 고통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기도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부터 육아에 대한 모든 정보와 역할을 산모에게만 주입해 성별 분업을 공고히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가족, 사회 등 지지체계와 연결이 매우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배우자와도 떨어진 채 모성 수행의 요구와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초보어머니들의 산후조리원 경험’(한국육아지원학회, 장혜인)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아닌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모유 수유, 채워지지 않는 엄마역할에 대한 배움 등으로 기쁨과 혼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산후조리원을 출산 직후 여성들의 정체성 관문 역할로 정의한다.

2) 공공 산후조리 정책 확대 요구 증가

최근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 증가, 산후조리 기간 가족들과 단절 감수, 반복되는 신생아 집단 감염, 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 확대 등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방식에 비판적인 여론과 더불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모색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1) 출산비용 부담 상승과 민간 산후조리원별 비용, 서비스 격차

“산후조리원 강남 1500만원³⁾, 청주 150만원. 가격 격차 최대 10배”

지역별, 산후조리원별 가격 비교 등 격차를 드러내는 보도는 해마다 고정적으로 이어진다.

통상 서울지역의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가격은 평균이 400만원선, 그러나 ‘호텔’ 급 등 서비스 수준과 면적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2023년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345만원 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서울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산후조리원 117 곳 가운데 2주 이용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3800만원선 (강남구 소재 특실. 일반실은 1200만원), 가장 낮은 곳은 송파구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요금이 209만원선이 었다. 가격 산정 기준은 없다.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출산부터 지역, 소득, 가정 여건에 따른 격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출산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지라도 양육과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는 이유다.

(2) 과도한 육아 관련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

민간 산후조리원은 모유수유 집중 교육을 비롯한 베이비 마사지, 보습크림 사용, 발달단계별 교재교구, 육아잡지까지 육아관련업체가 조리원과 연계해 자사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향후 마케팅 활용을 위한 산모, 신생아들의 개인정보 수집 창구가 되기도 한다. 가장 쉬운 예로 신생아 시기 조리원에서 어떤 분유를 처음 먹었는지에 따라 이후 해당 아동의 선호 분유 브랜드가 결정되기도 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육아에 대해 배우고자 조리원에 입소했던 산모들은 과도한 육아 마케팅에 오히려 피로감을 갖게 된다.

(3) 조리원 내 집단 감염 문제.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3) 신정훈 의원실 자료

그러나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 2018년 510명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신생아의 잠복 결핵 감염 사례는 사회적으로 우려를 키웠다.

이는 입원에 한정했던 보고대상이 2015년부터 입원과 외래로 확대된데 따른 증가 요인도 있으나 (한국 산후조리원협회측 입장)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생활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 참고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기준 위반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2018년 9월부터 시행

2.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의 전제 조건

1)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최우선.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6곳 (동두천, 연천, 과천, 가평, 양평, 광주)은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음.

이는 산모(이용자)가 없어 분만기관이 사라짐 vs 분만기관 부재로 산모가 타 지역 기관 이용해야 해 응급 상황 시 대처 어려움, 과 같은 공공의료 지원체계의 문제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 시사.

경기도 내 공공 산후조리원 역시 여주 1곳(포천 설립 추진 중)에 불과(민간 조리원의 70% 수준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50% 감면 혜택 부여).

2) 설립 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난관을 뚫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전국의 공공 산후조리원들은 모두 위탁 방식. 사업성과 신생아 감염사고 등 책임 문제로 위탁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적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음 (준공 승인 이후에도 운영자를 찾지 못해 개원 연기했던 포천 사례)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는 물론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절차, 역할, 인력 훈련 등

4) 2019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

에 경기도의 적극 행정 역시 필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 36% 수준.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효율적, 통합적, 재정적 지원시스템 구축돼야.

비슷한 사례로 지방 공공병원 설립의 최대 장애물은 경제성 분석, 그러나 공익적 의료를 하는 공공병원은 적자가 불가피함에도 주요 판단기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음. 예타 조사 면제나 조례제정, 필요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의지 필요⁵⁾.

일부 공공 산후조리원의 방문 선착순 신청 방식은 원성과 부작용을 낳기도 함. 여주의 경우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 이용자 선정에도 세심함 필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감면은 물론 신청과 예약 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유행시 공공 산후조리원의 역할 증대에 따른 고민도 필요

3) 여성에게만 육아부담을 부과하고,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기존 산후조리원을 답습하지 않아야

모유수유만을 강조하는 산후조리원은 산모를 수단화, 산후 우울을 오히려 촉진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음. 산후우울은 사회문화적 현상.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없고 돌봄 노동을 나눌 사회 시스템 부재로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 “누구에게나 5초의 시간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산후 우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3%로 높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은 비율은 산후조리원 27.5%에 불과했음. 격리와 단절. 제도화된 성별 분업의 공간이 되서는 안됨.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이용하지 않는 산모의 산후 우울, 산후 스트레스, 산후 불편감 및 산후활동에 대한 비교연구’(김민아, 최소영 등. 2013)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산후 우울점수가 이용하지 않은 산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 활동 정도에서도 비 이용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보다 높게 나타나 출산에 따른 신체와 심리적 회복 기능을 수행하는 산후조리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5) 보건복지부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에서 과거 공공의료의 역할을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의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로 목표 수정.

4) ‘조리를 돕는다’는 것을 넘어서 채워져야 할 부분들

민간의 산업 모델을 공공영역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시설확충’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됨.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필요 정책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51.3%), CCTV설치 (16.9%), 감염, 안전관리강화 (11.1%),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8.6%) 순으로 비용지원과 건강,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산후조리원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유관정책을 병행하는 역할을 통해 감염관리, 시설안전, 인력기준 등 업계 내 적정 기준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어야 함. 나아가 지역 내 모자보건, 육아 등 복합지원시설로 자리잡는 방안이 필요.

5)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요.

정부, 의료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견제와 참여가 가능해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음. 당사자인 시민의 제안, 협력, 감시, 평가가 있어야 공공성에 부합하고, 자칫 수익 논리에 지배되는 상황을 방지토록 해야.

6)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됨.

저출생이 사회적 난제로 대두된 이래 각종 돌봄 지원 정책 증가는 엄마를 향한 여성혐오의 새로운 표적이 됨. 저출생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성에게 육아를 짐 지우는 성불평등 사회구조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결과. 비용과 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참여 활성화, 산모의 출산휴가기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 무엇보다 출산 양육 등 돌봄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함. 따라서 공공 산후조리원 역시 단기적, 가시적 성과보다는 국가, 사회적 돌봄을 향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접근하는 인식적 노력이 요구됨.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간담회 토론편

한진숙 과장
(광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1. 광주시 출산 현황

1) 최근 3년간 광주시 출생아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광주시	1,04	0.96
합계출산율	경기도	0.94	0.88	0.85
	전국	0.92	0.84	0.81
광주시출생아 수		2,717	2,460	2,284

※ 출처 : 통계청

2) 관내 산부인과 출산 현황

- 관내 산부인과 5개소 중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1개소이며, 분만율은 4.2%임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10월말
분만건수	104	95	77
관내 산부인과 분만율	4.2	4.2	-

※ 출처 : 자체조사

2.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1) 현황

○ 전 국 : 21개소

- 운영중 : 16개소

(서울1, 경기1, 강원4, 충남1, 전남5, 경북1, 경남1, 울산1, 제주1)

- 운영예정 : 5개소(서울1, 경기1, 강원1, 경북2)

○ 경기도 : 2개소(포천시 미개소)

- 여주시 : 개소(2019년 5월), 위탁기관(경기도이천의료원), 규모(13실)

- 포천시 : '23년 개소 예정(경기도 포천의료원)

· 설립 기간 : 4년(2019.~2022.), 총사업비【137억원: 도비60% 시비40%】

· 규모 지상 2층, 20실(연면적 2,432㎡)

- 2022년 9월 자체 조사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16개소가 운영 중이며, 5개소가 운영예정으로 도내에는 2019년 5월에 개소한 여주시와 개소 예정인 포천시 2개소 임

3.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 현황

1)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

(가) 2019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계획」에 따른 검토

- 관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2개소, 분만율은 6.1%로 저조하고 광주시 똑똑맘 밴드를 통한 설문 결과 분만의료기관 부설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높았음

- 2014년 개소하여 운영중인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27실)의 경우 2018년 연간 수혜자는 719명, 운영비는 23억으로 **운영손실액이 10억 이상 발생, 출생아수 대비 수혜자는 14.4%였음**
- 전문인력(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확보의 어려움 예상
 - ▶ 인근 대도시 의존 출산·의료환경, 투입 예산대비 효율성 저조,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나) 2022년 민선8기 공약사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

- **응급상황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신생아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중요하나 관내 신생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 부재로 적기 처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설치 후 위탁 운영할 의료기관이 관내에는 없고 경기도 의료원과 연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 **감염병 발생 및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자와 미수혜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편 출산지원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설치비, 손실액 등의 발생이 우선 고려 대상은 아니므로 **설치를 계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경기도 「'23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수요 조사」에 검토 중 으로 의견을 냈음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3. 1. 1. 시행)

-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둘째아 기준 : 단축형 10일, 표준형 15일)
- 소요예산 : 728,352천원(시비100%)
- 2023년 지원 목표 : 1,440명 (3년 평균 출생아 약 2,400명의 60%)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함

【참고자료】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운영 16개소, 운영예정 5개소)

연번	시도	시군구	개 소	운영형태(기관)	시설규모	이용요금(만원) (2주,일반)
1	서울	송파구	'14.3월	위탁(송파구시설관리공단)	단독(3~5층) 27실	190(타구민209)
2	서울	서대문구	'23.10월(예정)	위탁(미정)	단독(지하1/지상4) 12실	250(타구민275)
3	경기	여주시	'19.5월	위탁(경기도의료원)	단독(2층) 13실	168
4	경기	포천시	'23.상반기(예정)	위탁(미정)	단독(2층) 20실	168
5	강원	삼척시	'16.2월	직영(삼척의료원)	의료원內 별관(3,4층) 13실	180
6	강원	철원군	'20.2월	위탁(철원병원)	단독(3층) 10실	179
7	강원	양구군	'20.7월	위탁(성심의료재단)	단독(2층) 8실	180
8	강원	화천군	'22.2월	위탁(주미래산후조리원)	의료원 內 별관(1층) 5실	180
9	강원	속초시	'23.9월(예정)	위탁(미정)	단독(1~2층) 10실	180
10	충남	홍성군	'22.2월	직영(홍성의료원)	의료원 內 별관(1층) 8실	182
11	전남	해남	'15.9월	위탁(해남병원)	병원 內 10실	154
12	전남	강진군	'18.5월	위탁(강진의료원)	의료원 內 10실	154
13	전남	완도군	'19.6월	위탁(완도대성병원)	병원 內 10실	154
14	전남	나주시	'20.11월	위탁(빛가람종합병원)	병원 內 16실	154
15	전남	순천시	'22.3월	위탁(현대여성아동병원)	병원 內 5실	154
16	경북	울진군	'20.11월	위탁(울진군의료원)	단독(1층) 8실	182
17	경북	김천시	'22.10월(예정)	위탁(김천의료원)	단독(2층) 12실	168
18	경북	상주시	'23. 5.(예정)	위탁(미정)	단독(2층) 13실	-
19	경남	밀양시	'22.6월	위탁(제일병원)	단독(2층) 8실	160
20	울산	북구	'21.7월	위탁(세나요양병원)	단독(2,3층) 28실	189(타구민226)
21	제주	서귀포	'13.3월	위탁(서귀포의료원)	단독(1층) 14실	154

※ 삼척, 화천, 양구 1년 이상 거주 시 무료 이용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법·제도 현황

최영준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산후조리원 관련 법·제도 현황

-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제15조의21**(신고, 휴업, 폐업, 결격사유, 준수사항, 교육 등), **시행령 제16조~18조**(건강진단 대상범위, 행정처분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제19조의2**(인력 및 시설기준, 이용요금 공개 등) 등
- (산후조리원 정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곳(모자보건법 제2조)으로 건축법상 제 1종 근린시설으로 분류되어 있음
- (산후조리원 관리) 동법에 근거하여 우리부는 모든 산후조리원의 **인력교육, 감염병 예방, 학대방지·영아기 건강 교육 및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중임

□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법·제도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21.12.21.)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22.6.21.)

- (설치주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주체가 됨

※ 「모자보건법」(’21.12.21.) 및 동법 시행령(’22.6.21.) 개정으로 광역지자체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권한 등 명시

□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22. 6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산후조리원보다 **낮은 이용료** 및 **수요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점으로 인해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전 **공공산후조리원 난립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려사항

-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당 지역 산모가 주요 수혜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 수요·공급, 재정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사무에 해당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 기초 지자체 별로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별도의 출산지원정책을 시행 중으로,
 - 정책 수요 측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요구도가 높은 점 등 이용자 관점에서의 욕구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종합제언

- 공공산후조리원은 관할 구역내 수요와 공급 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의료취약지 등 종합적 판단하에 지자체장이 결정하여야할 지역밀착형 사무이며, 최근 설립주체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지원보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출산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등을 통해 보다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9~) → 120%이하('20.7.~) → 150%이하('21.5.~)

** 양육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22.1.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바우처 200만원 지급 중

참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현황(16개소)

(’22.6월 기준, 단위: 명, 만원)

지역	지역내 민간산 후조리 원 유무	산후 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규모	1일 평균 영유아 수(명)	총사자 수(명)	이용 요금 (2주, 일반실)	입소율 (%)
서울 송파구	유	송파산모 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14.2.	위탁 (송파구시설 관리공단)	지상 3~5층, 산모실 27개	19	40	190	41
울산 북구	유	울산 북구 공공산후 조리원	’21.7.	위탁 (세나요양 병원)	지하 1층~지상 3층 산모실 28개	2	29	189	47
경기 여주시	무	경기 여주 공공 산후조리원	’19.5.	위탁 (경기도 의료원)	지상 2층 산모실 13개	11	17	168	74
강원 삼척시	무	삼척의료원 공공 산후조리원	’16.2.	직영 (강원도 삼척의료원)	삼척의료원 별관 3~5층, 산모실 13개	7	12	180	63.6
강원 철원군	무	철원군 공공 산후조리원	’20.2.	위탁 (철원병원)	지상 1~2층 산모실 10개	6	16	179	84.4
강원 화천군	무	화천군 공공산후 조리원	’22.2.	위탁 (주)미래 산후조리원)	지상 2~3층 산모실 5개	22.9	13	180	58
강원 양구군	무	양구군 공공 산후조리원	’20.6.	위탁 (성심의료 재단)	지상 1~2층 산모실 8개	1.5	17	180	88.9
충남 홍성군	무	홍성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13.4. (’22.2.)	직영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지상 1층 산모실 8개	2.8	11	182	30.6
전남 해남군	무	전남1호 공공 산후조리원	’15.9.	위탁 (해남병원)	해남병원 內 4층, 산모실 10개	6	11	154	69
전남 강진군	무	전남2호 공공 산후조리원	’18.5.	위탁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內 1층 산모실 10개	0.1	11	154	38
전남 완도군	무	전남3호 공공 산후조리원	’19.6.	위탁 (완도 대성병원)	완도대성병원 內 2층 산모실 10개	4.15	10	154	47
전남 나주시	무	전남4호 공공 산후조리원	’20.12.	위탁 (빛가람 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 內 2층 산모실 10개	5	12	154	63
전남 순천시	유	전남5호 공공 산후조리원	’22.3.	위탁 (현대여성 아동병원)	지상 4층 산모실 5개	4.6	5	154	88.5
경북 울진군	무	울진군 공공 산후조리원	’20.11.	위탁 (울진군 의료원)	지상 1층 산모실 8개	3.5	10	182	46
경남 밀양시	무	밀양 공공 산후조리원	’22.5	위탁 (밀양제일 병원)	지상 1층 산모실 8개	3.1	13	160	38.7
제주 서귀포시	유	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	’13.3.	위탁 (서귀포 의료원)	1층, 산모실 14개	6.5	14	154	38.5

별첨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

참고자료 1.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참고자료 2. [국회도서관] 국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
[국회도서관] 공공산후조리원 만족도 및 찬반 각계의견
[국회도서관] 중국의 산후조리원 현황

참고자료 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자료 1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수 준	팀 장	실 장
결			
재			

NARS
입법조사회답

소병훈 의원 귀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 법 조 사 관 김 주 경
Tel.6788-4722/Fax.6788-4729
E-mail: jkleo@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산후조리원 해외사례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비지원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또는 산후조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제안

(회답일 2022.7.20.)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해외사례의 경우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 기능을 활용함

■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및 ‘산후조리원’ 개념 및 관련 문화는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민간 도우미 파견업체에서 doula를 산모의 가정에 보내서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미국 사례와 비영리단체가 doula 파견 사업을 하며 원하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무료이며, 정부의 예산 보조와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영국 사례를 요약하였다.

의원실에서 제안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5조의7제2항에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및 공표”를 제15조의17제3항에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임신·출산·산후조리 정보 포털을 보완할 사안은 아닌지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서비스 제공량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서구의 ‘doula’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저소득 출산가정에 파견되는 건강관리사 사업을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 기간 연장 등으로 내실화함으로써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목차

1. 공공산후조리원 해외사례	1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비지원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3
3.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	5
4.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또는 산후조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제안	6

1. 공공산후조리원 해외 사례

-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및 ‘산후조리원’은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형성된 독특한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유사한 외국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적자 해소를 위한 외국의 유사 사례도 없음
 - 선진 각국은 임신·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전·분만·산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공적 의료보장 재원으로 이러한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있음
- 본 회답서에서는 우리나라 산후조리와 유사한 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산전·산후조리를 제공하는 외국 사례를 조사함
 -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산모는 출산 후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하며 감염예방, 모유수유 방법 및 신생아 돌보는 요령을 비롯하여 양육 관련 기술을 익혀야 하는 바¹⁾,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서구에서는 ‘doula(둘라)’라고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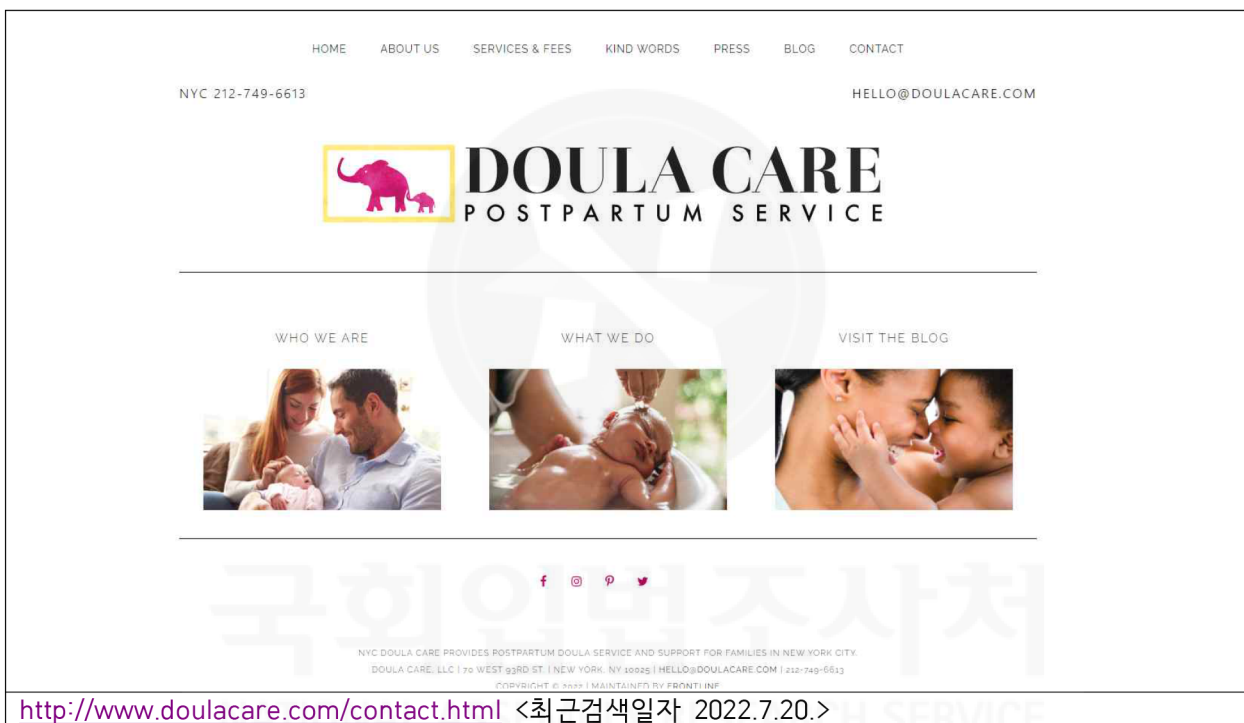
1) 미국

- doula는 서구사회에서 산전(antepartum)·산후(postpartum) 기간에 산모의 집에서 모유수유 방법과 신생아 돌보기 등을 가르쳐주고 산모의 합병증 예방 및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helper, servant)를 말하며, 민간기관이나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에서 doula 파견 사업을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로 민간 업체에서 doula를 파견하는데 출산을 전후하여 산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민간건강보험회사들이 doula service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해 줌(민간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줌)
 - doula는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함
 - doula는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제대(탯줄 자른 부위, 배꼽) 감염관리, 모유수유 및 분유수유 지도, 아기 재우기 등을 직접 수행하며, 산모에게 양육 기술 등을

1) 서구 국가들에서는 한의학·전통의학에서 말하는 산후조리라는 개념은 없음. 그러나 분만 후 약 6~8주간의 회복기인 산욕기(postpartum period) 동안 산모는 감염 예방 등의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보기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실천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휴식을 취해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의료적 지원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가르침

- 산모가 모유수유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요시 유축기 사용법 등을 가르침
 - 산후 출혈 관리, 변비와 부종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함
 - 산모 신체 상태에 적합한 식사를 만들어 줌
-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간단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줌
- 아래는 참고용으로 맨해튼, 부록클린, 퀸즈 지역을 포함하여 뉴욕에서 doula service를 제공하는 업체의 웹페이지를 캡처한 것임



- 수유 지원 및 분만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 돌라를 고용하려는 경우, 평균비용은 시간당 \$25~\$35 정도임
-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 의료부조(메디케이드)에서 비용을 지원받음
 - 오리건주는 인증된 업체의 돌라 서비스를 받은 경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장²⁾)에 비용상환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임. 2014년 미네소타, 2019년 뉴저지와 인디애나 등 여러 주가 그 뒤를 이었음
 - 이들 주에서는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가족은 부분 또는 전체 비용을 환급

2)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국민 의료 부조 제도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음

받을 수 있음

- 2019년 현재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샌프란시스코 및 포틀랜드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는 저소득층 및 위험에 처한 여성에게 지역사회 둘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모성 회복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2) 영국

- 영국의 doula는 산전·산후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분만을 도와주며, 전문 직업 교육기관의 회원이고 분만 지지(support) 과정을 훈련받음
 - doula는 ‘엄마의 엄마가 되어 주기’와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 출산 과정에서 의학적인 중재나 조언을 할 수는 없으나, 산모가 호흡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조절하여 동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 줌
- 출산시 doula service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임³⁾
 - Doula UK는 비영리기관으로 정부 예산 보조와 기부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임신했을 때 doula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상품권(voucher)을 판매하는 사업도 함
 - Doula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국가의료서비스체계(National Health System)의 질을 관리하는 기관인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Health and Excellence)에서 지표를 통해 관리함

The screenshot shows the Doula UK website. The main heading is "What Doulas Do". Below it, there is a paragraph explaining that doulas support in pregnancy, birth, and the postnatal period. A search bar is provided to find a doula in the user's area. There is also a sidebar with "Support our work" options, including "Join NOW", "Shop at Amazon", and "Donate NOW".

자료: <https://doula.org.uk/what-doulas-do/> <최근검색일자 2022.7.19.>

3) www.doula.org.uk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비 지원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출산을 하락 및 경영부진 등을 이유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일부 분만취약지역(예: 철원, 양구 등)의 경우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중임
- 민간산후조리원: ('19) 526개소 → ('20) 507개소 → ('21) 488개소

[표 1] 2021년 하반기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21.12.31.기준)

* 이용기간 14일 기준, 같은 등급 내 가장 높은 금액 표기

(단위: 만원)

번호	시도	시군구	산후조리원	수용인원 (임산부)	수용인원 (영유아)	종사자 수	일반실 비용	특실 비용
1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산후조리원	27	31	35	209	
2	울산	북구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28	28	29	189	
3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13	9	16	168	
4	강원	삼척시	강원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3	15	12	180	
5	강원	철원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10	10	17	178	178
6	강원	양구군	양구군공공산후조리원	8	8	16	180	
7	전남	나주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4호점	16	18	12	154	0
8	전남	강진군	전남공공산후조리원2호점	10	10	10	154	154
9	전남	해남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10	10	11	154	0
10	전남	완도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10	10	9	154	0
11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8	10	10	182	
12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14	14	15	154	

2)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5조의7제2항에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현행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한 제15조의17에서 국가의 책무를 언급하는 것은 「모자보건법」 조문 체계 상 다소 불균형 보이는 측면이 있음

현행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17제3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및 공표”는 제15조의20(산후조리원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기관 평가에 포함시키는 편임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

-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을 신설”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였고, 이 때 효율적인 관리의 대상은 조사분석 요구서의 요청내용 3번에서 “산모 및 산아 정보”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 임신·출산·산후조리 정보 포털로 “아이사랑”이 구축되어 있는 바, “아이사랑” 사이트를 보완할 사안은 아닌지 검토할 것이 요구됨

산후관리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아이사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산 > 산후관리 > 산후관리 > 산후 체중관리 [트 인체](#)

산후관리

산후 체중관리	산후 운동관리	산후 영양관리	산후 유방관리
산후 일상생활 관리	출산 후 조력자의 역할	산후 우울증	

산후 체중관리

산후 체중조절 포인트

출산 후 많은 산모들이 늘어난 체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정상 성인 여성보다 하루 약 320kcal의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며 충분한 영양소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 모유를 먹이는 여성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산후 회복기에도 균형된 영양섭취가 매우 중요함
- 하루 세 끼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함
- 단시간에 급격한 체중감량을 시도하지 않도록 함

4.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또는 산후조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제안

-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를 근거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자체 내 수요와 공급 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하여야 할 지역밀착형 사무라는 입장임
-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운영하기 보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출산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9~) → 120%이하('20.7.~) → 150%이하('21.5.~)로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왔음
 - 양육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 중임

- 다음과 같은 공공성 개념 및 정책 변화 등을 참고하여 ‘공공성 확대’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 2013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을 설립(개설)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기관 중심 관점에서 실제 수행하는 기능(역할) 중심 공공성 관점으로 전환하였음
 -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각각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공보건의료법을 개정하였음
-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민간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성 기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출산율 감소추세와 동시에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있는 군 지역의 경우,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민간의료기관의 폐업·철수·이전 등으로 필수의료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분만취약지역의 경우 정부가 지역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의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1) 지역거점 산부인과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 지원하는 안과 2) 현재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근거하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경우 시설·설비 등에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서비스 제공량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살펴본 서구의 ‘doula’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저소득 출산가정에 파견되는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 기간 연장 등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2

[국회도서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

- 국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
- 공공산후조리원 만족도 및 찬반 각계의견
- 중국의 산후조리원 현황



수신자: 소병훈 의원

국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



-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 경제담당 박영희 (☎ 4280)
주무관(국내) 안재원 (☎ 4448)
E-mail: legis2@nanet.go.kr
- 회 답 일: 2022년 7월 6일

목 차

I. 개요

II. 현황

1. 경기도
2. 서울시
3. 전라남도
4. 강원도
5. 기타 지자체

III. 참고자료

- ▶ 의회정보회답서는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및 국내외 관련기관의 사실(fact)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국회도서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참고하여 입법 및 의정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

I. 개요¹⁾

- 출산장려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함.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써, 출산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의 목적이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사회보전 정책의 일환이기도 함.
- 민간산후조리원의 고비용²⁾, 비용격차, 위생 및 안전의 문제 등은 저소득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 경감, 그리고 저비용의 질 좋은 서비스체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요구로 나타남.

II. 현황

- 2022년 7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16개 소이고, 건립 중인 곳은 6곳임.³⁾
 - 지역별로는 전남이 5개 소로 가장 많았고, 강원, 경기, 서울, 제주, 충남, 울산, 경북, 경남에서 운영 중임.

1) 김경례. (2016).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논쟁과 문제점 : 정책담론을 넘어 여성건강 운동으로. 인문사회 21, 7(3), 785-787, 794.
2) 2020년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 원, 최고 2,600만 원임(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7.4. 인용: <http://theminjoo.kr>)
3) 경향신문. (2022.3.16). 공공산후조리원 시대...서울 특실 수천만원, 이곳에선 2주에 46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2022.7. 기준)

지역		비고
경기도	여주시	
	포천시	예정
서울시	송파구	
	서대문구	예정
전라남도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	
	순천시	임시개원
강원도	삼척시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속초시	예정
	영월군	예정
제주도	서귀포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북도	울진군	
	김천시	예정
	상주시	예정
경상남도	밀양시	
울산시	북구	

1. 경기도⁴⁾(1+1개 소)

명칭	개원일	시설규모	건립예산	이용요금 (2주, 일반실)	일평균 영유아수
여주 공공산후 조리원	2019.5	지상 2층/ 768㎡ / 13실	20억 (도비) 31.2억 (시비)	168만원(도민) /50% 감면(취약계층)	10
포천 공공산후 조리원 (예정)	2022년 예정	지상2층/ 2,350㎡/ 20실	54억 (도비) 47억 (시비-부지비 24억, 추가시설확장 23억)		-

주: 1)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연도별 소요 예산은 '19년 10억 원, '20년 22억 원, '21년 22억 원임.
2) 여주는 경기도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포천은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 중임.

자료: 경기도. (2021). [보도자료]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얻어. 1-3. 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7.4. 인용: <http://theminjoo.kr>
박주은. (2021).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실태 및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브리프, 34, 1-8. 재구성.

- 경기도는 2019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고,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에 개원 예정임.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셋째 아 이상,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20년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는 전체의 46.4%를 차지함.
- 2020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282명 중 지역별로는 여주시민 126명 외 지역민이 55.3%(156명)로 광주, 이천, 성남 등 경기동남부 주민을 위한 광역공공시설로 자리를 잡음.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는 경기도와 여주시가 각각 70%, 30%씩 분담함.⁵⁾
- 경기도 분담금은 20, 21, 22년 매년 20억 원, 여주시 분담금은 매년 8.6억 원임.⁶⁾

4) 경기도. (2021). [보도자료]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얻어. 1-3.

5) 경기일보. (2017.4.9).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8월 여주시에 개원.

2. 서울시(1+1개 소)

명칭	개원일	시설규모	건립예산	이용요금 (2주, 일반실)	일평균 영유아수
송파산모 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지상3층~5층/ 2,896㎡/ 27실	88억 (구비)	190만 원(구민)/ 10% 가산 (타지역주민)/ 30% 감면 (취약계층, 셋째아) 20% 감면 (장애인, 유공자 등)	13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예정)	2022년 하반기 예정	지상4층, 지하1층/ 1,351㎡/ 12실	54억 (구비) 47억 (시비)	250만 원/ 50% 감면/ (취약계층) 10% 감면 (구민)	-

주: 송파 산후조리원의 경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음.

자료: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022.7.4. 인용: <http://mom.songpa.go.kr>

서울PN. (2022.4.12). '뚝심' 공공 산후조리원 첫 삼... 맘 편한 서대문.

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7.4. 인용: <http://theminjoo.kr>

경상남도. (2022.4.22).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재구성.

- 서울시는 2014년 송파구 건강증진센터에 산후조리원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고,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하반기 개원 예정임.
- 산후조리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은 매년 5~6억 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밝힘.)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충당되고 있고, 2022년 24.7억 원, 2021년 23.8억 원임. 2021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11.5억 원임.)⁸⁾⁹⁾

6) 여주시. (2021.12.23).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 570, 574.

7) 한국일보. (2021.10.12). 반값이라 호응 좋는데 운영할수록 적자... 공공산후조리원 딜레마.

8) 송파구 사업예산서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산후조리원 운영비를 합한 금액으로만 공시하고 있음.

9) 송파구청. (202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사업예산서, 651.

3. 전라남도(5개 소)

명칭	개원 일	시설규모	건립예산	이용요금 (2주, 일반실)	일평균 영유아 수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해남)	2015	해남종합병원 2층 / 494㎡/ 10실	5억(도비) 4.6억(병원자체예산)	154만 원 / 70% 감면 (둘째 이상, 취약계층 등)	6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강진)	2018	강진의료원 1층 / 616㎡/ 10실	7억(국비) 7억(도비) 3억(병원자체예산)		3.7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완도)	2019	완도대성병원 2층 / 730㎡/ 10실	5억(도비) 2.5억(군비) 9.4억(병원자체예산)		3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나주)	2020	빛가람종합병원 2층 / 793㎡/ 10실	5억(도비) 5.67억(병원자체예산)		8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순천) (임시개원)	2022/ 2024	현대여성아동병원 4층/ 211.7㎡/ 1단계-5실(22년) 2단계-10실(24년)	(1단계-5실) 병원자체예산 (2단계-10실) 5억		-

주: 5개 소 모두 각 병원 위탁운영임.

자료: 전라남도 > 출산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022.7.4. 인용: <http://jeonnam.go.kr>
경향신문. (2019.6.5). [웃음치료·마사지...“산후조리 걱정 마세요”](#).

연합뉴스. (2022.3.15).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순천시 임시 개원.

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7.4. 인용: <http://theminjoo.kr> 재구성.

- 전라남도는 2015년 해남군 전남 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강진, 완도, 나주, 순천에 차례대로 개원하여 운영 중임.
- 2022년 개원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은 임시개원 상태로 5실이 운영 중이고, 2024년에 10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임.

- 2021년 전남 지역 산모 8,567명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04명으로 10명 중 1명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함.¹⁰⁾
 - 조리원 이용 산모의 56.1%는 둘째 아 출산 산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 요금의 70%를 감면해주는 요금 감면 대상이었음.

- 2022년 해당 시군에서 조리원에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보조금은 총 14.2억 원이고, 이용 감면료 지원에 쓰인 예산은 7.5억 원임. 이 중 전남도가 부담한 예산은 각각 5.6억 원, 3억 원으로 40%의 비용을 부담함.¹¹⁾¹²⁾

4. 강원도(4+2개 소)

명칭	개원일	시설규모	건립예산	이용요금 (2주, 일반실)	일평균 영유아 수
삼척 공공산후 조리원	2016	삼척의료원 내 /636㎡/ 13실	3.5억(국비) 0.88억(병원자체예산)	무료 (삼척시민)	6
철원 공공산후 조리원	2020	지하1층, 지상3층/ 1,318㎡/10실	36억(군비) 8억(국비) 6억(도비)	179만원 /70% 감면(취약계층) /50% 감면(1년 이상 거주)/ 10%(1년 미만 거주)	-

10) 경향신문. (2022.3.16). '최저 46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아기 울음소리 키울까

11) 전라남도 > 세입세출예산 > 세출예산서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감면료 지원 항목. 2022.7.6. 인용: <http://budget.jeonnam.go.kr>

12) 전남 내 위치한 5개 소 모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비는 검색되지 않음. 따라서 전남도와 각 시군이 지원하는 보조금만 회답서에 작성함.

명칭	개원일	시설규모	건립예산	이용요금 (2주, 일반실)	일평균 영유아 수
양구 공공산후 조리원	2020	지상2층/ 825㎡/8실	23억(군비) 6억(도비)	180만원/ 100% 감면(1년 이상 거주)/ 50% 감면(1년 미만 거주)/ 30% 감면(인근 시군 거주)	4
화천 공공산후 조리원	2022	화천의료원 별관 지상2층 / 603㎡/5실	9.7억 (국비3억)	180만 원/ 100% 감면(화천군민, 취약계층, 셋째아 등)/	-
속초 공공산후 조리원 (예정)	2023 운영 예정	속초의료원 인근 지상2층 / 1,692㎡/10실	24억(시비) 6억(도비)	-	-
영월 공공산후 조리원 (예정)	2024 운영 예정	영월의료원 인근 공유지 지상2층 / 900㎡ / 10실	32억(군비) 6억(도비)	-	-

주: 철원과 양구는 각각 철원병원,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에 위탁운영하고, 나머지는 직영임.

자료: 영월신문. (2022.4.23). 영월읍 덕포리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철원군. (2019.10). 철원군수 공약추진 보고자료, 89.

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7.4. 인용: <http://theminjoo.kr>

경상남도. (2022.4.22).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5. 재구성.

- 강원도는 2016년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철원, 양구, 화천에서 운영 중이며,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에,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에 운영 예정임.
- 삼척시의 경우, 2017년부터 삼척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4.5억 원 수준임.
- 철원군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로 2020년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부족해 2021년 8억 원으로 증액했고, 2022년에는 기본

예산 8억 원에 추가로 1.4억 원을 반영할 예정임.¹³⁾

- 양구군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로 2020년 4억 원에서 2021년 9억 원으로 증액했고, 2022년에는 10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함.
 - 투입되는 예산은 산모 1명 당 평균 180만 원, 출생아가 쌍둥이면 230만 원이고, 위탁운영비는 6.88억 원, 이용료 감면에 2.7억 원이 소요됨.¹⁴⁾
-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만 초점을 맞춰 신축비용만 지원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힘.

13) 강원도민일보. (2022.6.29). 공공산후조리원, 산모들 반겨도 지자체 예산 부담 '허덕'.

14) 농촌여성신문. (2021.12.24). 산후조리원에서 행복한 출산하세요.

5. 기타 지자체(5+2개 소)

명칭	개원 일	시설규모	건립예산	이용요금 (2주, 일반실)	일평균 영유아 수
서귀포 공공산후 조리원	2013	지상1층 / 548㎡ / 14실	12억(지방비) 6.27억(국비)	154만 원/ 70% 감면(취약계층)	6.5
울진 공공산후 조리원	2020	울진의료원 내/710㎡ / 8실	8억(도·군비)	182만 원/ 50% 감면(취약계층, 셋째)/ 30% 감면(울진군민)/ 10% 감면(경북도민)	3.5
울산 북구 공공산후 조리원	2021	지하1층, 지상3층 / 2,883㎡/28실	64억(복권기금) 30억(시특)	189만 원/ 50% 감면(취약계층, 셋째)/ 20% 가산(울산 북구 주민 외)	-
밀양 공공산후 조리원	2022	지상2층 /523.9㎡ / 8실	22.3억(시비)/ 10억(도비)	160만 원/ 70% 감면(밀양시민, 취약계층 등)	-
홍성 공공산후 조리원	2022	지상1층 / 580㎡ / 8실	4억(국비-특교세) 3.8억(군비) 2억(도비)	182만 원/ 50% 감면(취약계층)/ 30% 감면(시민)/ 10%(홍성의료원 분만 산모)	-

- 주: 1)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위탁 운영 중임.
 2)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13년에 개원했으나 이용인원 저조와 집단감염 등으로 휴업, 리모델링하여 재개원한 것임. 충남 홍성의료원 직영으로 운영 중임.
 3) 울진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진군의료원이 위탁 운영중임.
 4)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은 세나요양병원에, 밀양은 제일병원에 위탁운영 하고 있음.

자료: 제주매일. (2014.8.24). 서귀포 산후조리원 '무늬만' 공공시설.
 연합뉴스 (2022.1.24). 충청권 첫 공공산후조리원 홍성서 개원... "산후 돌봄 사각 해소".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 > 요금안내. 2022.7.4. 인용: <http://chppcc.or.kr>
 프레시안 (2020.10.26). 경상북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울진의료원에서 11월 2일 개원.
 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7.4. 인용: <http://theminjoo.kr>
 경상남도. (2022.4.22).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5.
 연합뉴스. (2021.7.21). 울산 첫 공공산후조리원 북구에 개원...26일부터 운영.
 조선일보. (2022.5.6).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밀양에 개소... 6월 정식운영.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0. 21.] [경상남도밀양시
 조례 제1490호, 2021. 10. 21., 제정] 재구성.

명칭	개원 일	시설규모	건립예산	이용요금 (2주, 일반실)	일평균 영유아 수
김천 공공산후 조리원 (예정)	2022. 10 (예정)	지상2층/ 1,432㎡/12실	43억(시비)/ 27억(도비)	168만 원/ 50%(취약계층, 셋째아 등)/ 10%(김천시민)	-
상주 공공산후 조리원 (예정)	2023. 5 (예정)	지상2층/ 1,982㎡/13실	46억(시비)/ 12억(도비)	-	-

주: 상주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 경북일보 기사와 달리 ‘지상3층’에서 ‘지상2층’으로 설계변경되었고, 건립예산의 경우 2019년 경북일보 기사에서는 총액 58억 원(시비 46억, 도비 12억 원)이지만, 2022년 경북도민일보 기사에서는 사업비 91.35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자료: 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7.4. 인용: <http://theminjoo.kr>
 김천인터넷뉴스. (2021.6.22).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축공사 착공 스타트.
 경북일보 (2019.4.8). 상주시, 출산 장려 정책 단력...공공산후조리원 설치 13억원 확보
 경북도민일보. (2022.2.6).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순항’.
 경상남도. (2022.4.22).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재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경상북도 울진, 울산광역시 북구, 경상남도 밀양, 충청남도 홍성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그밖에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10월에, 상주 공공산후조리원은 2023년 5월에 개원이 예정되어 있음.
-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의 2022년 운영비는 6.6억 원이고, 전액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함.¹⁵⁾
- 울진 공공산후조리원의 2022년 운영비는 6.88억 원이고, 전액 울진군이 부담함.¹⁶⁾
-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2년 운영비는 13.2억 원이고, 울산 북구가 부담함.¹⁷⁾

15) 제주특별자치도 > 예산/재정/세정 > 세부사업별 세출정보. 2022.7.6. 인용: <http://jeju.go.kr>

16) 울진군청 > 행정·소식 > 재정정보 > 세출현황 > 사업 및 예산정보. 2022.7.6. 인용: <http://uljin.go.kr>

17) 울산광역시 북구 >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 세출현황(세부사업별). 2022.7.6.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022년 연간 운영비는 5.18억 원이고, 전액 시비로 부담함. 이용감면료 지원비는 1.34억 원이고 이는 경남도와 밀양시가 50%씩 부담함.¹⁸⁾

-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연간 운영비 6억 원(예상 수익금 2억 원 제외, 운영비 적자분 4억 원 보전)은 홍성군과 충남도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¹⁹⁾²⁰⁾
 -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연간 4.21여 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음.
 - 충남도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은 운영비 등에 대해 5대5 부담원칙에 의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정착해 도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홍성군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인용: <http://bukgu.ulsan.kr>


18) 밀양시 > 행정정보 > 예산정보 > 세입·세출운용상황. 2022.7.6. 인용: <http://miryang.go.kr>.

19) 홍주포커스. (2020.8.27). "충남도 첫 공공산후조리원, 홍성군민 차등지원해야".

20) 홍성군재정정보공개시스템. 2022.7.6. 인용: <http://hongseong.go.kr>

Ⅲ. 참고자료²¹⁾

자료명 / 저자 / 발행사항	원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 경상남도, 2022.3.23. 붙임5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공공산후조리원 공약발표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2021.12.30. ²²⁾	
2022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 여주시 / 여주시, 2021.12.23.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실태 및 산후조리원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 박주은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브리프 ; vol.34 / 인천여성가족재단, 2021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얻어: 지난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94%,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 81%... / 경기도 / 경기도, 2021	
철원군수 공약추진 보고자료 / 철원군 / 철원군, 2019.10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논쟁과 문제점 : 정책담론을 넘어 여성건강 운동으로 / 김경례 / 인문사회 21. 제7권 제3호, pp.785-804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06.30.	


21) 은 국회 내에서만 원문보기가 가능함

22) 이 자료 4쪽의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에서 '서울 송파구' 부문 개소일과 이용요금에 오류가 있음. '12.9월', '350만 원'을 각각 '14.2월', '190만 원'으로 수정하여야 함.

국회도서관 팩트북 이용 안내

- 팩트북(Fact Book)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정리해 ‘한눈에 보기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²³⁾

호수	주 제	발간연월	원문
95호	젠더평등	2022. 05	
94호	디지털화폐	2022. 05	
93호	주요국의 국가전략	2022. 03	
92호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2021. 12	
91호	메타버스	11	
90호	가족의 다양성	10	
89호	디지털 시대의 정당	08	
88호	친환경자동차	07	
87호	디지털 헬스	04	
86호	2021 미국의 파워 엘리트	02	
85호	바이든	01	
84호	플랫폼노동	2020. 12	
83호	미래 학교와 디지털시대	11	
82호	모바일 간편결제	11	
81호	언택트 트렌드와 정책	09	
80호	스타트업 육성 정책	06	
79호	통계로 보는 국회 72년	05	
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05	
77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03	
76호	신재생에너지	2019. 11	
75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총분석	11	
74호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	8	
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7	
72호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	4	
71호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	3	
70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2018. 11	
69호	(초연결사회의 핵심고리) 블록체인 총분석	10	
68호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7	
67호	1인가구 전성시대	7	
66호	가상화폐 대해부	4	
65호	G2 大충돌: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3	
64호	저출산 극복	2017. 12	
63호	주택임대차 보호	9	
62호	마이스(MIICE)산업	9	
61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7	

23) 은 국회 내에서만 원문보기가 가능함.



수신자: 소병훈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만족도 및 찬반 각계의견



-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 경제담당 박영희 (☎ 4280)
주무관(국내) 안재원 (☎ 4448)
E-mail: legis2@nanet.go.kr
- 회 답 일: 2022년 8월 2일

목 차

I. 개요

II. 만족도 조사

III.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각계 의견

IV. 참고자료

- ▶ 의회정보회답서는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및 국내외 관련기관의 사실(fact)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국회도서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참고하여 입법 및 의정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만족도 및 찬반 각계의견

I. 개요²⁴⁾

- 출산장려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함.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써, 출산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의 목적이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사회보전 정책의 일환이기도 함.
- 민간산후조리원의 고비용²⁵⁾, 비용격차, 위생 및 안전의 문제 등은 저소득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 경감, 그리고 저비용의 질 좋은 서비스체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요구로 나타남.

II. 만족도 조사

1.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문항을 13.4%가 응답하였음.²⁶⁾

24) 김경례. (2016).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논쟁과 문제점 : 정책담론을 넘어 여성건강 운동으로. 인문사회 21, 7(3), 785-787, 794.

25) 2020년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만 원, 최고 2,600만 원임(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2022.8.1. 인용: <http://theminjo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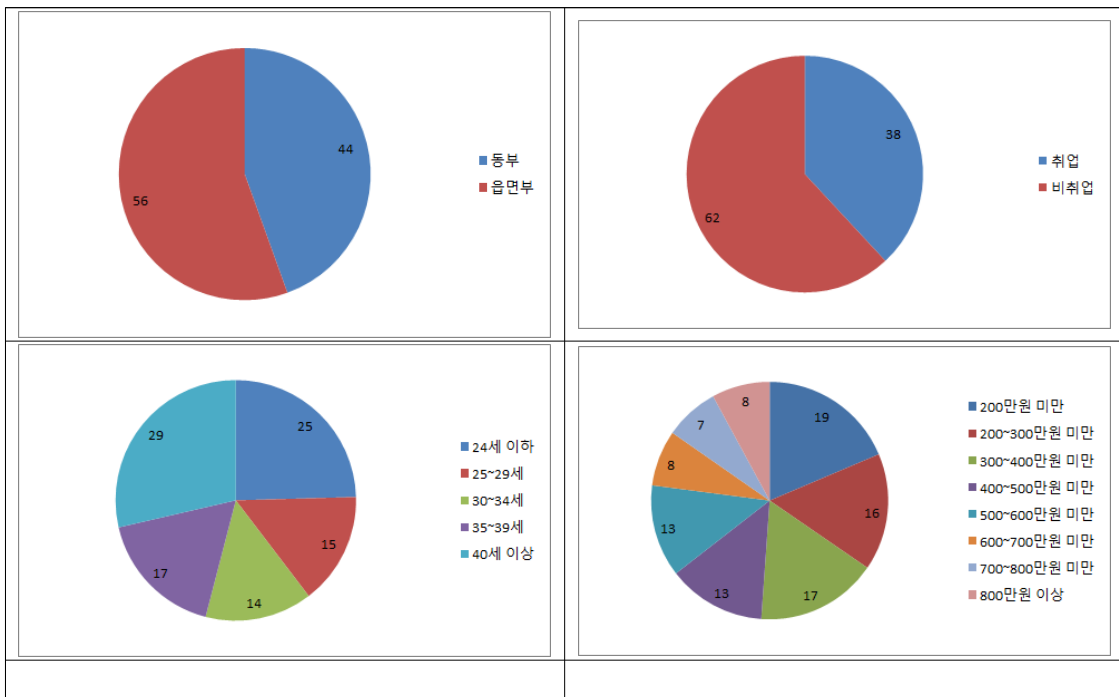
26) 보건복지부. (2022.1.26).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 이는 '산후조리 경비지원'(75.6%), '배우자 육아휴직·출산휴가 활성화'(37.6%),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0.8%),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20.8%)에 이어 5번 째임.27)
- 2018년에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라는 항목이 순위권에 들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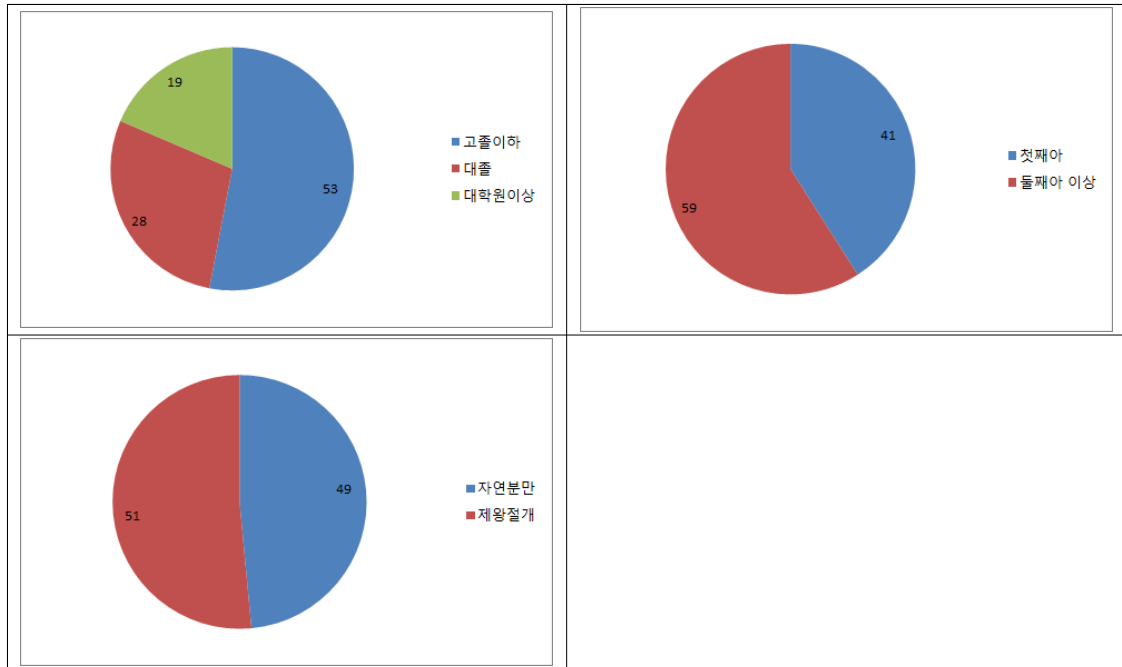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문항을 선택한 산모를 특성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문항 응답 산모 특성별 유형

(단위: %)



27) 2020년 출산한 산모, 전국 3,210가구(3,127가구 응답 완료, 97.4%) 대상, 복수 응답 가능 문항임.



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문항을 선택한 13.4% 응답자를 각 특성에 따라 백분위화하여 재구성함.
 자료: KOSIS >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2가지).
 2022.8.1. 인용: <http://kosis.kr>. 재구성.

2.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 2015년 9월 개원 후부터 2017년 6월까지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객 47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의료진 친절도 등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응답함.
 - 만족도 조사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세부항목

항목	만족도
신생아 감염관리 및 예방	99%
의료진 친절도	97%
청결 상태	96%
편의시설	90%
산모 식사 및 배식 서비스	90%
산후조리 프로그램 운영	87%

자료: 연합뉴스. (2017.8.14).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만족도 높아. 재구성.

- 이외에, 전라남도도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에 ‘신생아 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6%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따라서 도내 모든 공공산후조리원에 확대, 시행할 계획임.²⁸⁾
- ‘신생아 캡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3. 여주 공공산후조리원²⁹⁾

- 2019년 5월 개원하여 같은 해 7월까지 579명이 이용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총점 93점이 나옴.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한 산모는 경기도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감염이나 안전에 대해 안심이 되고 신뢰할 수 있어서 좋으며, 흔히 공공은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 정도 있어 보니 만족스럽다고 밝힘.

28) 빛가람뉴스. (2022.5.21).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 캡’ 만족도 높아.

29) 여주시 > 보도자료. 2022.8.1. 인용: <http://yeaju.go.kr>

4. 송파 공공산후조리원³⁰⁾

- 둘째를 출산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 사이에서 송파구 조리원은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라며 가격대비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함.
-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강씨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 미흡한 부분은 민원을 통해 개선 요청을 하면 비교적 잘 시정이 되는 것 같았으며, 뉴스에서 조리원 신생아실 사고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데 아무래도 공공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함.
- 둘째 아이를 출산한 또 다른 산모 고은경(34)씨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뽑음.³¹⁾
 - 첫째를 낳았을 때는 당시 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근처의 민간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약 300만원을 내고 이용하였는데 방이 작은 것 빼고는 민간산후조리원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꼈고, 집과도 가깝고 깨끗해서 만족스럽다고 인터뷰함.

5.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³²⁾

- 2017년 1월, 서귀포보건소가 2016년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항목별 답변 중, 만족도 보통 이상을 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이용요금 만족(97.9%), '식단 만족(97.1%), '프로그램 만족(93.8%), '접근성 만족(99.2%) 임.
- 다만, 불편한 사항으로는 '모유 수유 교육 횟수', '식단 다양화', '산모 방 온도 관리'등으로 지적됨.

30) 노컷뉴스. (2022.7.22). '공공 산후조리원' 중단...임신부들 반발에 송파구청장 '화들짝'.

31) 한겨레21. (2014.11.10). 산후조리도 '복지'다.

32) 뉴제주일보. (2017.1.31).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99.2% 만족".

Ⅲ.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각계 의견

1. 찬성

- 조원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³³⁾
 -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예전처럼 가정 내에서 산후 조리가 어려워 산후조리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시설로 운영되어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집단 감염사고가 빈번하고 피해보상 기준이 미비함.
 - 산후조리원의 2주간 입소 시 전국 평균요금은 일반실 기준 202만원을 넘어 산모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큼.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요금 인하 효과가 겨우 1만 원에 불과하여 부담완화 효과가 거의 없음.
 - 따라서 저렴하고 안전한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³⁴⁾
 - 산후조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가족 내의 돌봄 공백과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개입의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서 적절한 지원임.
 - 접근도와 이용도 측면에서 지역과 소득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접근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가 필요함.
 - 단,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배현지(국립안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³⁵⁾
 - 6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해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 산모실 회전율을 지표로 민감도 분석을 함.

33) 김해영. (2016).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4-13.

34) 김해영. (2016).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14-16.

35) 배현지, 김진현. (2020).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에 관한 융합 연구: 편익-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1].

- 총비용은 37억 1,339만 원, 총 편익은 55억 7,896만 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는 1.50, 순편익은 18억 6,557만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민감도 분석에서는 산모실 회전을 17.4인/1실인 경우 편익/비용 비는 1.42이고, 15.4인/1실인 경우 1.26으로 추계함.
-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반대

○ 대한의사협회³⁶⁾

- 지방의료원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⁷⁾)에 대해, 분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료원 현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임.
-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당수 지방의료원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적자 해결을 위해 수익사업 경쟁을 강요받으며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편적인 접근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사업에 산후조리원 운영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급감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 및 육성책 마련, 지방의료원 내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임금자(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³⁸⁾³⁹⁾

-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산후 조리원의 평균 이용 가격이 211만 원이고 국민이 이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 낼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본다는 건, 전혀 긍정적이지 않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⁴⁰⁾의 개정 이

36) 의협신문. (2021.9.7). 분만도 못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지원하라니...

37) [211187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2인). 2022.8.1.

인용: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U1X0V7D1P2S1R6L0A1R5Y1N0N4L5

38) 뉴데일리. (2016.2.23). "공공산후조리원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 형태".

39)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공공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 6-7.

40) [19180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2.8.1. 인용: <https://likms.assembly.go.kr/bill/>

유가 산후조리원의 위생상 문제라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생상의 문제들은 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 이 같은 아이디어는 국가가 나서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

○ 김희숙(한국산후조리업협회 회장)⁴¹⁾⁴²⁾

- 공공산후조리원은 과잉 투자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짐. 소수의 인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임.
-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민간 산후조리 시장질서를 붕괴하는 법안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아니라 민간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기존 민간산후조리원 시설을 활용하거나, 바우처제도, 산후조리원 인증제도, 모성 교육 및 모자동실 활성화 등의 대안을 활용하여야 함.

○ 오문성(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⁴³⁾⁴⁴⁾

-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의 성격이 강함. 복지 우선순위 자체를 왜곡하고 무차별적인 복지를 만드는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임.
- 국가의 현재 재정 상황을 보면 보편적 복지를 할 시기는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볼 때 결국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돼 재정창출 효과를 크게 만들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함.

billDetail.do?billId=PRC_B1A5G1S2V0D2X2M1K2J7V5M5E4U2I6

41) 뉴데일리. (2016.2.23). "공공산후조리원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 형태".

42)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공공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 12-27.

43) 뉴데일리. (2016.2.23). "공공산후조리원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 형태".

44)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공공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 8-11.


IV. 참고자료

자료명 / 저자 / 발행사항	원문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1.26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얻어: 지난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94%,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 81%... / 경기도 / 경기도, 2021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에 관한 융합 연구 : 편익-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 배현지, 김진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2020. 1 2), p. 409-418 / 한국융합학회, 2020.11.28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강훈식 외 / [남인순 의원실], 2018.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 국회의원 김해영 / [김해영 의원실], 2016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논쟁과 문제점 : 정책담론을 넘어 여성건강 운동으로 / 김경례 / 인문사회21, 제7권 제3호, pp. 785-804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6.30	
공공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 : 토론회 / 바른사회시민회의 /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복지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대안 권고 :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등으로 산모의 선택권 확대가 적절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국회도서관 팩트북 이용 안내

- 팩트북(Fact Book)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정리해 ‘한눈에 보기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⁴⁵⁾

호수	주 제	발간연월	원문
95호	젠더평등	2022. 05	
94호	디지털화폐	2022. 05	
93호	주요국의 국가전략	2022. 03	
92호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2021. 12	
91호	메타버스	11	
90호	가족의 다양성	10	
89호	디지털 시대의 정당	08	
88호	친환경자동차	07	
87호	디지털 헬스	04	
86호	2021 미국의 파워 엘리트	02	
85호	바이든	01	
84호	플랫폼노동	2020. 12	
83호	미래 학교와 디지털시대	11	
82호	모바일 간편결제	11	
81호	언택트 트렌드와 정책	09	
80호	스타트업 육성 정책	06	
79호	통계로 보는 국회 72년	05	
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	05	
77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	03	
76호	신재생에너지	2019. 11	
75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총분석	11	
74호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	8	
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7	
72호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	4	
71호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	3	
70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2018. 11	
69호	(초연결사회의 핵심고리) 블록체인 총분석	10	
68호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7	
67호	1인가구 전성시대	7	
66호	가상화폐 대해부	4	
65호	G2 大충돌: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3	
64호	저출산 극복	2017. 12	
63호	주택임대차 보호	9	
62호	마이스(MIICE)산업	9	
61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7	

45) 은 국회 내에서만 원문보기가 가능함.



수신자: 소병훈 의원

중국의 산후조리원 현황



-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 해외자료조사관(중국) 김선재 (☎ 4336)
E-mail: ksj4728@nanet.go.kr
- 회 답 일: 2022년 7월 1일

목 차

I. 개요

II. 현황

- ▶ 의회정보회답서는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및 국내외 관련기관의 사실(fact)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국회도서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참고하여 입법 및 의정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산후조리원 현황

I. 개요

- 산후조리원의 중국식 용어는 ‘월자센터(月子中心)’임. 이는 산후조리 기간이 통상 1개월(月)인 것에서 기인함.
- 중국 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산후조리원의 현황 및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음.

II. 현황⁴⁶⁾

- 2021년 기준 중국의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는 97억 위안(약 1조 8,700억 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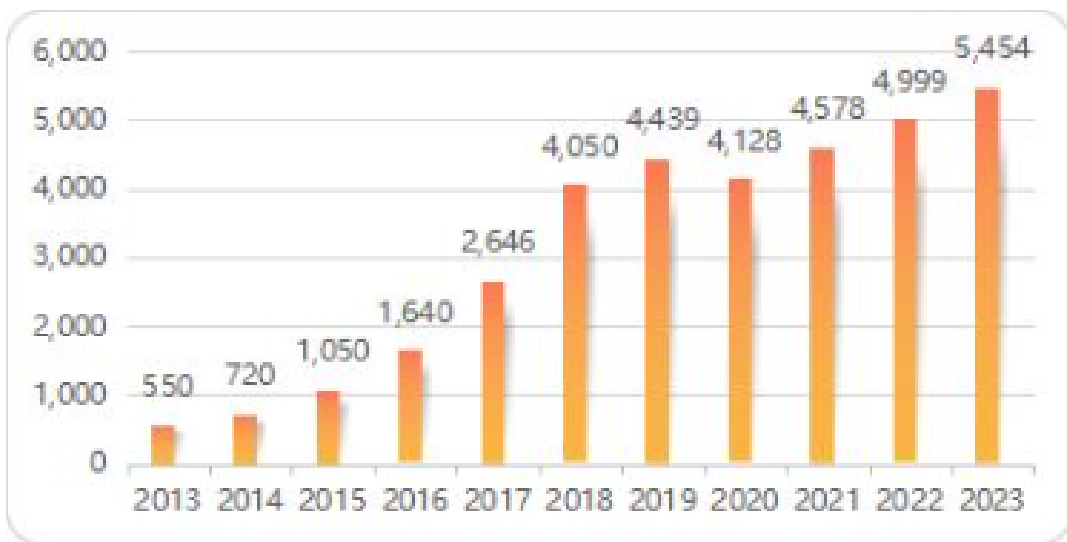
중국의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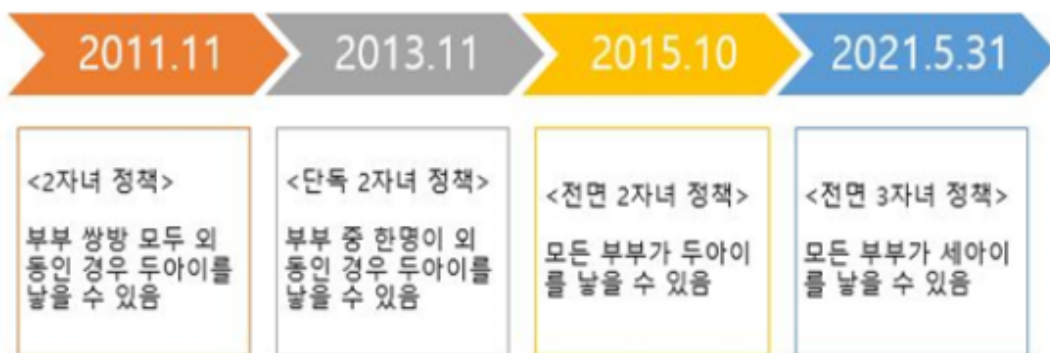
46) KOTRA 하얼빈무역관. (2022.3). 중국 산후조리원 발전 현황 및 흑룡강성 시장 잠재력.
KOTRA 우한무역관. (2021.11). ‘3자녀’ 정책 발표, 중국 산후조리 시장 황금 시대를 맞이하다.

- 출산율은 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중국은 2021년 5월부터 '3자녀 정책' 등 출산 독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23년엔 중국 내 산후조리원이 5,0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 내 산후조리원 개수(단위: 개)



중국 출산정책의 변화



-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의 이용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신생아 수가 연간 1,000만 명을 유지할 경우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는 2025년 455억 위안(약 8조 8천억 원), 2030년 1,038억 위안(약 20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산후조리원은 통상 1·2선 도시 등 대도시에 집중됨. 일례로 중국의 4대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는 전국 산후조리원의 36.9%가 존재함. 나머지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역시 각 지방정부의 성도(우리의 도청 소재지)에 집중됨.
- 대도시의 산후조리원 평균 단가는 5만 위안(963만 원)에서 6만 8천 위안(1,310만 원) 수준임(산후조리기간 28일 기준). 반면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비교적 낙후한 지역의 경우 3만 위안(578만 원) 수준임.

중국 주요 대도시의 산후조리원 가격(단위: 위안)



- 고비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 산업은 여전히 수요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음. 중국 산후조리업계 상장사인 아이디궁(愛帝宮)의 경우 3개월 전 예약은 기본이며, 일부 고가 패키지 상품은 반년도 더 전에 예약을 해야 함.
- 주요 대도시의 경우 2년 전후로 건설된 양호한 시설의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문의가 많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

- 중국 산후조리원 운영모델은 △호텔 서비스식, △단독 별장식, △병원 부속식, △사회 가정식 등 총 4가지로 분류됨.

중국 산후조리원 주요 모델 및 특징

분류	특징	장점	단점	점유율
호텔 서비스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혹은 임대를 통해 산후조리센터로 리모델링 - 현 시장의 주요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초기 투자 자금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비 완비 - 시설 확장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 타시설 대비 높은 이용료 	40%
단독 별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장을 산후조리원으로 개조하여 서비스 제공 - 가옥 시설이 양호하여 인력관리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 보호와 함께 아늑한 환경 제공 - 브랜드 파워 형성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초기 투자 자금 -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필요 - 타시설 대비 높은 이용료 	35%
병원 부속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 부속된 시설로 외래 진료에 유리 - 출산 후 산모 이동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산부인과로 이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이 많음 - 시설 인테리어 미흡 	25%
사회 가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의료진과 가사도우미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산후 조리원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이 적고 비용이 낮아 창업에 적합 - 타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부족 - 시설별 가격차이가 큼 	-

- 중국 산후조리업계의 상위 5개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11.3%에 불과함. 업계 1위인 아이디궁(愛帝宮)의 시장점유율은 4.3%에 불과하며,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웨이거(魏閣)와 바오생(宝生)의 점유율도 각각 3.8%와 1.6%로 매우 낮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2. 23.

발의자 : 소병훈 의원

찬성자 : 소병훈 · 강민정 · 김두관
김남국 · 김민석 · 김주영
남인순 · 양정숙 · 양향자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제2항, 제15조의20, 제23조의2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0제1항 중 “평가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
3.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
5.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
6.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7.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에 관한 정보
8.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
9.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
10.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u>평가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표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u><신 설></u></p>	<p>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u>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 <p>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p> <p>-----</p> <p>-----</p> <p>-----</p> <p>-----</p> <p>-----<u>매년 평가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u>공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23조의2(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u></p>

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
3.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
5.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
6.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7.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
상담센터에 관한 정보

8.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
한 정보

9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에 관한 정보

10.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
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
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
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
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효
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 ③ (생략)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

-----.

1. ~ 3. (생략)

4.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2. 23.

발의자 : 소병훈 의원

찬성자 : 소병훈 · 강민정 · 김두관
김남국 · 김민석 · 김주영
남인순 · 양정숙 · 양향자
어기구 · 인재근 · 이병훈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에 달했음. 이처럼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출산 후 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전문가들도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1조제2항제4호).

법률 제 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을 “태아검진, 출산·산후 조리 및 양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u></p> <p>5. ~ 9.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태아검진, 출산·산후조리 및 양육</u>-----</p> <p>5. ~ 9.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